

제426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30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3.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4.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3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3
3.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3
4.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3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부터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장철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부터는 거의 원구성이 새로 된 것처럼 많은 위원님들이 바뀌셨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같이 의지와 뜻을 모아서 산자위 예산소위 제대로 한번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동력을 얻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오늘 심사할 추경안에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책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고요.

(박수)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앞서서 저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보임하신 위원님들 계셔서 인사말씀 한 번씩 간단하게라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위원**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산중위에 좀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 제2차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인지하다시피 대외여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가부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어렵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보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 속에서 혹시라도 필요필급,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없는지 잘 살펴서 충분히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에 계신 분들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위원님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산자중기위는 정쟁이 있는 상임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서로 여야 간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잘 논의해 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정동만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동만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 출신 정동만 위원입니다.

모처럼 장철민 소위원장님 만나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예결위장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너무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같이 함께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간사님께서 명하셔서 예산소위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저는 산자·중기 법안소위만 해 봤었는데 이번에 예산소위까지 하게 되어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어 가면서 함께, 우리 에너지전환 그리고 소상공인 살리기 예산이 이번 추경의 테마인 것 같은데요 같이 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감사합니다.

서왕진 위원님께서서는 도착하시면 이따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원구성 새로 된 느낌이네요. 특히나 예결소위 멤버가 많이 바뀌어서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1)

3.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2)

4.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3)

(10시11분)

○소위원장 장철민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산업부에서 오신 분들 소개 한번 하시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소개 한번 할까요?

새로 시작하는 만큼 차관님부터 인사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지난주에 미국 출장을 갔다가 어제저녁에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예결위에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옆에는 실장님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저는 무역정책국장 서가람입니다.

○구자근 위원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와서 산업부 전체적인 답변이 되나?

○소위원장 장철민 아니, 뒤에 다른 차관님도 계신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저는 무역 관련된 것 3개 안전……

○소위원장 장철민 순서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국내전시회 개최지원과 관련해서 하반기 50개 지역 특화 전시회 추가 수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현안 대응이 보다 시급하므로 추경안 증액분 중 50%, 2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강승규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시회는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개척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창출에도 효과적이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김교홍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시회 특성을 고려해 평균 수출계약액 등의 성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실적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업효과를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나경원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강승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합니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지역전시회는 지금 200개 이상으로 현재 지원 수요가 충분한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200개 전시회 중에서 25년 본예산으로 지원되는 전시회는 18개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50개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나머지 지적사항은 부대의견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강승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본예산에 전시 지원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렸을 때 어떻게 전시가 그냥 다 모두 수용 가능하다고 하시지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에서 왜 이렇게…… 재정 소요 때문에 본예산에서 전시 지원 건수가 적었어요? 본예산에서 지금 전시 건수가 몇 개예요, 지원 건수가?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 서가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전시회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제외하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가 한 320개 정도가 돼 있고요. 상반기에 한 120개 정도 개최가 되고 하반기에 좀 많아서 200개 정도 됩니다.

상반기 120개 중에 저희가 13개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사실 예산 상황이 좀 제약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하반기에 지금 200개 예정 중에 18개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추경으로 반영해 주시면 50개 정도 더 지원을 하면, 사실은 지역 전시회는 특히 지역에 바이어가 찾아가고 지역전시 사업자들에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어서 가급적 많이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200개 중에서 50개 정도는 저희가 적격성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같은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승규 위원 이게 그러면 전시만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회의나 이런 MICE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규모 지역전시회 이런 전시만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전시회는 국제회의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의 예를 봤을 때 조금 작은 지역전시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전시회가 있기는 합니다.

○오세희 위원 제가 말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장철민 김동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김동아 위원 200개 중에서 50개만 지원하면 나머지 150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원래는 그게 주최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국고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서, 전시산업진흥회가 전시 주최자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올 상반기에 49개 전시회를 신청받아 가지고 31개 선정했다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50개를 추가적으로 넣었을 때 이것 수요가 자신 있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예, 저희가 지금 매년 전시회 개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약간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한 320개, 올해는 한 350개 정도……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단가는 늘어나지는 않고요,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대상이.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예,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업계라는 게 모든 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전시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데 전시회도 대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수가 대략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년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을 한다고 전시 건수를 이렇게 50개를 대폭 늘렸을 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자격기준 미달이거나 이런 전시가 그냥 이렇게 국고 지원받는데 돈이 낭비될 우려가 있

는 게 아니냐라는 제 지적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대가로, 50 대 50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랄까요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고요. 또 전시회 개최할 때는 참가업체 그리고 또 주변의 호텔, 음식점 등등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지방마다 예를 들면 해양박람회 그리고 최근에 오송에서는 화장품 혹은 콘텐츠 이렇게 다양한 업종과 그런 품목들 대상으로 전시회 수요는 많은 상태입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려는 게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시 MICE 산업을 좀 알거든요. 그런데 전시회 등을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뭔가 바이어들이든지 이렇게 전시회 하는 데 알맹이 있게 내용 있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도 하는 거잖아요. 전시회를 열면 국가가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시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 해서 갑자기 대폭 늘렸을 때 내용이 없는 전시산업에 그냥 갖다가 퍼 주기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 정도 제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오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오세희 위원** 지금 가뜰이나 판로에 대한 대책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이런 전시가 굉장히 큰데, 사실 저도 민간에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을 유치하고 보여 주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계속 오더를 따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니까 지원해도 한 7000만 원 정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것을 진행하다 보면 또 수십억이 되는데 그 정도를 해서 동기부여를 좀 일으키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증액을 했으면 증액했지 이게 감액의 요소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강승규 위원님 말씀을 부대의견으로 남기고 넘기는 게 어떨까라는……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구자근 위원** 본부장님, 이것 지금 전체 320개 중에 상반기 120개, 하반기 200개 이었는데 이게 개최 횟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구자근 위원** 우리 정부에서 지원한 횟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호도하세요?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지금 우리 신청 건수가 300개 다 신청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300개 다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래 이래 필요하니 정부에 자금 요청하는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위원님, 그 신청 건수는 대충 전시업체에서 매년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 몇 개 정도 지원한다 그게 지역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한 30건 내외 정도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원하는 것도 서류도 내야 되고 여러 가

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개수를 300개 200개 120개 이래서, 상반기 120개, 200개 이러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건수는 연 한 사 오십 건 정도.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수도 그 정도 수준에서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년 그런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하반기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할 거면 1차 추경 때는 왜 신청 안 하셨어요?

그러면 50개 지역, 지금 지역특화 전시회는 50개 지역 수요조사 다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올해 개최 예정인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50개 전시회 중에 이 금액으로 하면 방금 오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칠팔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스 하나 이벤트 업체에 가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노리는 아니면 효과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미미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예를 들어 민생 회복도 더 시급한 게 많은데 이렇게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추경의 목적에 맞지도 않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오히려 강승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정부 측 답변 좀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예산을 굉장히 효과가 높은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그 성과지표를 전시회 개최로 인해서 수출계약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2023년, 24년 보면 한 33억 불, 36억 불 그렇게 수출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더 성과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참관객 수라든가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 수라든가 이런 성과지표를 저희가 추가해서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하고 또 보충하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내년 26년도 당초 예산에 좀 더 올리세요. 추경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오세희 위원님 말씀 더 주시겠습니까?

○**오세희 위원** 보통 전시회나 이런 박람회가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시즌으로 봤을 때 연초보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전시와 박람회 그다음에 상품들을 전시해서 거기서 같이 좀 소통하고…… 예를 들어 판로도 판로지만 소통하고 정보 제공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에 밀려 가지고 굉장히 판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대하는 게 그 업계의 박람회, 이런 전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7000만 원, 8000만 원이라 적지만 그런 것들 일부라도 좀 보조해서 정부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서로의 상품도 비교하고 내년에 상품은 뭐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이런 아이디어도 얻는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전시가 지금 딱딱 무 자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상품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소통 그리고 판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은 꼭 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아시다시피 관세의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로 동기 부여를 해서 자꾸 열어 줘야지 이것도 닫고 저것도 닫고 하면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거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왜 상반기에 제대로 본예산에다 태우지 않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해서 50개를 갖다 지원하는 예산을 썼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반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서 상반기가 넘어갔었고 작년에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감액 예산으로 처리를 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증액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로 본예산이 통과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50개 대상으로 삼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무산되거나 그럴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된 전시회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반영하는 것에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하나만.

○소위원장 장철민 짧게 하세요.

○강승규 위원 올해 본예산에 66억이 편성돼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 예산편성 금액은? 69억……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위원님, 66억 중에 48억이 전시회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는 66억……

○강승규 위원 그러면 44억이에요, 올해 편성된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예, 48억입니다, 본예산이.

○강승규 위원 48억.

작년에는 얼마 편성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작년에는 52억이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52억이었고 올해 48억인데 48억에, 올해 지금 추경에서 배를 여기다가 더, 43억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계획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본예산에 43억 편성된 예산을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경제 활성화한다 해서 거기다가 지금 43억을 넣겠다는 거야, 다시. 이런 추경 편성이 있어요? 여기 예결위 간사 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추경 편성 기준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1억도 남아 있고, 현재 본예산에.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위원님, 남아 있는 것은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이고요.

○강승규 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이걸 내년에 사용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이게 22년에 63억까지 갔다가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원도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금 생각을 한 것은 이게 수출 증대 효과도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전시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전시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지역이 어렵고 한 걸 반영해서 조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제 위원님들……

○김동아 위원 아니, 산자부가 지금 명확히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집을 한다면 한 몇 개 정도 기업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아까 30개 한다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30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위원님, 몇 개가 신청할까는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요.

○김동아 위원 아니, 이렇게 증액한다 하면 통상적으로 한 50개를 해 줬다 했을 때 평소에 한 200개가 지원해서 충분히 거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쉬워서,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한다면 그런 기업도 지원해서 더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서가람 몇 개 기업이 지원할 거라는 예상은 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예산액이 얼마고 몇 개 기업 정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200개의 기업 중 상당수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말씀 충분히 하지 않으셨어요?

○구자근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짧게 해 주시지요, 짧게.

○구자근 위원 그건 아니지요.

지금 연례로 202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신청 전시회 수,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200개, 300개를 이야기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지자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신청한 전시회 수가 22년도에 58개, 23년도에 54개, 24년도에 54개 그리고 25년도 상반기에 지금 44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큰 4, 5년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한 횟수가 대충은 나옵니다. 이게 갑자기 올해 안에 20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기에 작년에 받았던 올해 당초 예산 속에서, 66억 속에서 전반기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반기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50개를 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면 그것 다 쓰지도 못합니다. 불용될 겁니다. 그래서 더 내실 있게 알차게 해서, 지금 그 심정 같으면 당초에 더 많이 신청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세희 위원 저 얘기 좀 할게요.

○소위원장 장철민 오세희 위원님까지 하고 정리해도 되겠지요?

오세희 위원님까지 말씀하시고 정리하시지요.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는 많은데 진입장벽이 높아 가지고 확대를 못 한 거잖아요. 사실 많습시다. 부산이고 어디고 많잖아요. 그런데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게 지원에 다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을 좀 낮춰 가지고 그냥 폭 넓게 지원하세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좀 움직이고 해 줘야 경기도 활성화되는 거지 이게 확대를 하자는 의도지 이걸 가지고…… 보고, 올해 만약에 봤을 때 이게 불용이 됐다 그러면 내년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동안 너무 높았던 진입을 좀 낮추자, 많이 주자 그래서 많이 모이게 하고 상품에 대해 서로 어떤 소통도 좀 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보류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야당 위원님들께서 집행 가능성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기존보다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추경의 목적에 반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도 크고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여기에서는 보류를 하고.

다만 지금 일종의 수요조사가 안 돼 있는 건 아니지요? 어떤 전시회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리스트업은 돼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다시 논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이런 어떤 전시회들 그리고 어떤 분야의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급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제공해 주시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구자근 위원** 그래요. 50개 지역, 충분히 50개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그것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근거가 나왔으니까.

○**소위원장 장철민** 이게 사실 불용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출기업들한테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정확하게 되면 충분히 납득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사업은 이 정도 하고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쪽입니다.

연번 2번,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추경안에는 2025년 대기수요 중 50%만 반영을 했으므로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34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용입니다.

기업 수요를 고려해서 특히 2025년에는 지원 신청 기업 총 2545개사 중에서 1426개사만 선정돼서 지원 중입니다. 그런데 추경안에서는 미선정된 1119개사 중 50%인 570개사 지원 예정이지만 100% 지원될 경우에 중소기업들의 대체시장 발굴 등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래 김교홍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증액 의견으로 받는 데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3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중 수입상품전 및 해외구매상담회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용입니다.

무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 마찰 예방과 또 원부자재 공급성 다변화를 위해서 수입상품전시회, 해외구매상담회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억 원 증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4번입니다.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EV 소재·부품 OPEN LAB은 핵심 인프라 구축비 30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그러면 의견 주시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하고 연번 4번 사업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산업부1차관입니다.

여기 계신 산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무리 세세한 사안이라도 항상 자세히 보고드리고 협의드리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가서 보고드리고 협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바로 이어서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증액 의견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정부 측에서는 예산 증액에 공감하고요. 특히 15종이 필요한데 예산에 장비가 구축되는 게 2종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해 주신 30억 26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2종 플러스해서 6종까지는 추가로 할 수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종까지 가능하다는 거는 그냥 바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무슨 고시 개정이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것까지, 올 하반기에 6종에 대한 구매 계획까지가 확인이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소진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30억 26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쪽입니다.

연번 5번, 국가생산성 혁신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광융합산업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은 광융합산업 중소기업에게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확대를 위해 4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이 사업은 수출 성과가 아주 우수하고 또 업계의 수요도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에 동의합니다.

보시면 이 사업이 22년부터 계속해서 경쟁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확인해 보니 그 수요가 하반기에 충분히 소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4억 9100만 원 증액에 정부 측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5번 사업 4억 91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형 CDMO 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 사업은 치료소재 국산화 및 중소형 CDMO 육성을 위해서 신규 내역사업으로 2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물대체시험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동물실험 규제 강화 및 관련 시장 성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국비 1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아시는 바와 같이 특화단지 지정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가 작년 6월에야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예산들이 25년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시기적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고 그때 예산 사업에다가 반영하려고 만들어 놨던 계획이 이미 다 기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3억 3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 밑의 사업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 밑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차원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강원 춘천시에 대한 지원 및 동물실험 규제 강화로 인한 동물을 대체한 시험개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17억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쪽, 7번입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은 대규모 투자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479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신규 내역사업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통합변전소 구축에 297억 6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부 측은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1000억 원 한도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 산업부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마는 산자위에서도 예결위 쪽에 많은 협의를 해서 힘을 좀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1000억 원 한도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지금 전체 누적액으로 용인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인프라 지원과 관련해서 1000억이 되면 그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예산 당국이 그렇게 발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0억 원 한도가 이미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이나 그런 데 규정화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겠습니까만 산자위 차원에서도 예결위 쪽에 협의를 해 주셔서 힘을 좀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용인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단 개발업체가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지원해서 만약에 산단을 형성해서 그 회사가 분양했을 때 그 분양 수익을 국가에서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마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일방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특별법상에 환수 규정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김동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지원된 게, 저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원된 게 그 업자한테 분양 수익……

지금 SK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단 개발 공사에? 개발 공사인가, SK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분양 수익은 SK가 얻고 돈은 나라에서 지원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해 주는 말이 조성원가에 분양을 해 주는 걸로 서로 합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김동아 위원 그게 어떤 의미지요?

○강승규 위원 그 얘기는 SK가 시행을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남기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면 지원하는 대로 해서 다 합해서 조성원가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시행사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 쪽의 여러 가지 지원이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발사한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SOC 인프라를 지원하는데 SOC 인프라를 지원하더라도 그 개발 시행하고 있는 SK 어찌고저찌고한테 가지 않는다는 이런 얘가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이 예산하고 상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반도체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물론 용인이나, 지금 반도체 관련은 국가 간 경쟁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소부장 관련해서 지방에서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 관련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00억, 200억이 까질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냥 그걸로 지정한 걸로 그 의미를 두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산업에, 오래된 지역 산단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가 큰 틀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기 지정을 했으면 지방산단도 한번 돌아봐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대체로 공감은 하시는 것 같아서 증액으로 정리를 할 텐데, 하나 부탁드립니다 싶은 건 산자부에서, 기재부가 좀 자의적으로 1000억 캡을 씌웠었다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자의적은 아니고 대외 공포까지 해서, 내부적으로만이 아니라 대외 공포까지 되어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관계 부처 협의까지 갔고.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추경이든 본예산을 심의하든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할 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원칙과 기준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좋기는 좋습니다. 우리가 첨단산업 지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자의적으로 국회에서 증액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소위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니까 증액으로 정리를 하되 이후에 부처 간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산자부에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어떤 수준의 재정지원 수준과 기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리면서 일단 이 사업은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강승규 위원님, 한마디만 더 하시지요.

○강승규 위원 이게 아마 반도체 특별법에서 하면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첨단산업 특별법에 따라서 준용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상황이 워낙 참예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하려는 추세이고, 저희 의원실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SK 측에서 이게 너무 절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 부분을 아까 용인, 그러니까 누적액이 1000억이다 이런 부분 등을 기재부가 당초 첨단산업 특별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걸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완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산자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당초 취지, 지정한 기재부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설정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추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넘어가시지요.

8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8번,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입니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이 산업현장의 AI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AI 자율제조 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 수요기업 영업비밀 침해 방지, 공급기업 책임성 담보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두 가지 다 정부 측에서는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현장에서 AI 관련해서 기업들이 많이 수요 요구도 있고 합니까라는 실질적으로 업종별로 보면 데이터 표준화 정도나 품질이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자로 재듯이 진행하는 것들은 아닐 거고 예산이 현장에서는 각기 다 다를 건데, 어떤 업종이 어떤 AI 솔루션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지금 말씀처럼 중견기업이 대상인 사업인데 중견기업 각각의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수요들은 각 사마다 다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고 중견기업이 자기가 어플라이(apply)를 해서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수요에 대해서 구체화한 것을 제출해서 AI 솔루션 기업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이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무엇보다도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더 주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산자부에서 올해 5월 달에 이 업종 관련해서 면접 진행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은 지금 실효성이나 이게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 지금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진행하고 있는 것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중복성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이 부분 쪽은 근본적으로, 오히려 자율제조 AI 산업, AI 팩토리 사업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AI 모델을 개발해서 다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미 AI 솔루션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이미 레디메이드(ready-made) 되어 있는 것을 업체한테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구자근 위원 규모는 지금 이거보다는 저게 많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자율제조 AI 팩토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잖아요, 더 포괄적이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좀 더 크고 그게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든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예전에 상임위에서 AI 산업 내재화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추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던 바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AI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은 많이들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뭐 데이터센터 부분이라든지 AI 자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우리 전 산업 분야에서 실제로 AI가 내재화되고 그러면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정책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이 추경 이후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나 이후에 산자부가 AI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추가적인 증액 의견은 없어서 원안 유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이후에 사업들을 더 잘 추진해서 가지고 내년 이후에는 AI 부분의 어떤 산업 분야 내재화

그걸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이 정도 하고 9번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의견대로 부대의견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페이지 5쪽, 9번입니다.

섬유판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섬유판선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지식 기반화구축 사업에 국내 중소 봉제기업 간 제조공급망을 구축하는 AI 기반 섬유판선 제조공급망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에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제조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에 예산 부족분 지원을 위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산패션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구축 사업에 예산 부족분 지원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은 전부 다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차관님, 전에 인사 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자부가 무슨 ‘패션 봉제 산업’ 이것 다루는 게 맞나요? 이것 중기부 쪽으로 좀 부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얘기해서 중기부에 넘기는 게 오히려 더 이쪽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산업을 산자부가 쥐고 있으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원론적으로 섬유산업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과 같이 연계돼서 기능적으로도 섬유산업에 접근이 될 수도 있고 섬유산업 자체만으로도 육성 방안이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기청으로 넘어가는 경우 좀 더 열심히 장관님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 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션산업과 섬유산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 부산 신발산업이 지금 전국 사업체의 한 42% 수준 되거든요. 영세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이고 아까 김동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고민을 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 패션이나 신발산업 이게 지금 완전히 다 죽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예.

또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제조지원 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지금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 목표가 달성이 불가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정동만 위원 그래서 기 투입비용이 매몰될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 꼭 증액을 해 주시고, 패션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이 두 사업은 꼭……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두 개 다 계속사업인데 사업이 계속 예산이 깎이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꼭 챙겨 주십시오.

○소위원장 장철민 김동아 위원님도 감액하자는 의견은 아니었어서……

○정동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증감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큰 이견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김동아 위원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일부 아마 좀 이견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산업정책하고 중소기업정책이 꼭 구분되는 건 아니라서, 우리 섬유산업에 대해서 산자부가 하면 중기부가 못 하고 중기부가 하면 산자부가 못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김동아 위원 산자부도 반도체·AI 이런 것 위주로, 첨단산업으로 가야 되고 중기부에서……

○소위원장 장철민 뭐 그거야 이제 진짜로 토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이후에 상임위에서 더 논의하시기로 하고.

○오세희 위원 산업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전통산업에 대해서 소외시하거든요. 그것을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산업부다 중기부다 이게 아니라 산업부가 너무 에너지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키울 수 있는 산업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유 산업도 좀 키우고 패션이든 뭐 어떤 거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견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다른 자리에서 토론하시도록 하고 이것은 증액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사업,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페이지 6쪽입니다.

10번,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자율랩 기술개발(R&D)입니다.

먼저 AI 신약개발 및 차세대 모달리티 시장을 조기 선점하고 국내 기업의 의약품 제조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일단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첫 번째, 원안 유지 필요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성과지표 재설정 쪽은 저희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개선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성과 지표 개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보니까 AI 모델 3건, DB 3건, 모듈 6건, 통합시스템 2건, 약물 제조·실증 5건 등의 목표를 잡고 있어서 단순히 개수 위주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사 공정 대비 개발 속도 향상 효과라든가 자율랩에서의 자율화 수준이라든가 장비 국산화 비중이라든가 링거—약물 복합체 라이브러리 수라든가 바이오접합체 제조공정 성공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의 총괄적인 목표에 부합하게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개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사안들 반영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준비되면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차관님, 이게 2차 추경인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22억 원입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말고, 전체 사업비 총액이 얼마냐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25년부터 2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액은 497억 원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서 총 한 500억 정도 되지요, 국비가 그중에 한 370억 들어가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것을 2차 추경에 왜 이렇게 급하게 넣었어요? 그냥 앞에서 보면 22억 짜리 신규, 그냥 그걸로 마치는 것 같은데 500억짜리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충분히 숙의하고, 여기 부대의견 속에나 원안 유지에나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지요? 당초 예산에서 여야 간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해서 충분히 해도 되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전부 다 나라 빚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남아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국가부채가 얼마인데,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2개 내역사업 속에 세부과제가 4개씩 들어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과제를 하나씩 선행하면서 AI하고 로봇하고 융합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번 과제, 2번 과제, 3번 과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4번의 AI하고 로봇하고 융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보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AI와 로봇의 융합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에서, 지금 당장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저희들 쪽에서 확인을 한 바로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500억짜리가 돌아가고 있는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 편성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쪽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아이템이고 추가적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요 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겠더라는 차원에서 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내부사업에 4개씩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자근 위원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세부과제 수행하다 보면, 2번·3번 과제를 결과를 봐야 되지 그것 보고 AI하고 로봇하고 융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판단을 보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4번 결과까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냥 그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이것은 그냥 제가 보류를 해도 되나요?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얘기를 들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정확하게 부처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순서가 필요한 R&D인가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지,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조금 더 상세히 설명 좀 드리면……

○소위원장 장철민 예, 그러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정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정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좀 크게 말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정대 2 내역사업과 3 내역사업은 동시에도 가능한 사업이고요. 4 내역사업은 2 내역과 3 내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 내역사업도 같이 시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의 경우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마지막 내역사업의 경우에는 차년도에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2 내역, 3 내역과 동시에 해야 돼서 통합시스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설계비 정도는 지금 잡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근 위원 세부에 2 내역사업의 설계시스템 개발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야 되고,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2·3은 동시 진행한다고 쳐도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계속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4를 그냥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정대** 그게 개념 설계라는 게 있는데요 사업 시작을 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 계속 수정하면서 하면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4 내역에도……

○**구자근 위원** 됐습니다. 이 설명을 저한테 좀 하라고……

○**소위원장 장철민** 제 생각에는 설명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후에, 이것은 살짝 보류했다가 보고 중간에 좀 해 주시고 이따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더 주실 분 없으시면 일단 10번 사업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사업 보고……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11번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잠시만요.

서왕진 위원님 오셔서 간단하게 보임인사 듣고 넘어가시지요.

○**서왕진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결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감사합니다.

그러면 11번 사업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번, 디자인 산업진흥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디자인산업진흥 사업에 권역별 디자인 특화 리빙랩 구축을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25억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사업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2번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내역사업인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은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5억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시므로 5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7쪽입니다.

산업AI 아카데미 구축과 관련해서 재직자, 은퇴·경력자, CEO 등을 대상으로 산업·AI 융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 구축 비용 1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100억 원 반영에 대해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므로 100억 증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사업.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4번, 미래 모빌리티용 타이어 소재 초격차 실현을 위한 스페셜티 합성고무 제조 기술개발 신규사업입니다.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초격차 스페셜티 합성고무 및 혁신 공정 기술 개발비 7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70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사업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5번, 산업AI 확산 기반 조성입니다.

산업AI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산업AI 혁신센터 6개소 구축비용 6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웅 위원님, 의견 있으신 거 아닌 거지요?

○박상웅 위원 예.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60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사업.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6번입니다.

바이오산업·자동차부품 산업의 AI·로봇 자율제조 플랫폼 조성입니다.

AI 로봇 기반 바이오·자동차 부품산업 대량제조 플랫폼을 도심융합특구에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비용 등 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억 증액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쪽입니다.

17번, 첨단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검증을 위한 후공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비 5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50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8번, 전기상용차용 멀티-배터리 시스템 다중부하 평가기반 구축입니다.

전기상용차 멀티 배터리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성능안정성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 기반 장비구축비 등으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강승규 위원 역세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18번 사업 30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9번, 자동차 보안성 인증평가 지원사업입니다.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사이버 보안법규 등을 제정해서 자동차 및 부품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사이버 보안 대응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살짝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번, 30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0번,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 지원 기반구축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의 기반시설과 표준 개발 및 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구축비 2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번 사업 24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쪽, 21번입니다.

AI 자율제조 실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지역 제조기업의 AI 모델 및 데이터셋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AI 자율제조 실증지원센터 설계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번 20억 증액으로 정리하고, 22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2번, 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실환경 모사기반 구축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물류운송 전주기 검증 및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 선도를 위해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번 사업은 15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3번, 산업AI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입니다.

산업AI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인력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환경 구축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등에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번 사업 15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사업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4번, 지능형 센서 소재·부품·구성품의 spin-on을 위한 균 적합성 검증 기술지원입니다.

지능형센서의 신뢰성 검증 및 민수기술의 방산전환 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에 1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번 사업 14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5번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0쪽입니다.

25번, 소버린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입니다.

소버린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예산 13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번 13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6번, 친환경자동차 전력변환시스템 전력손실 평가 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전력변환시스템의 고전압·고효율화 대응 및 시스템 성능 최적화·안정성 확보 등 기술개발 지원에 26년 장비구축비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번 사업 10억 반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들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장철민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 주요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는 2030년 적기 준공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급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번 사업은 20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빨리해 줘야 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2번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번, 지역산업 위기대응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맞춤형 지원은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실직자 재취업교육 등 인력 양성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33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1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이차보전을 3%를 4%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이차보전을 적용 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첫째는 금액을 증액하는, 33억이든 21억이든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 산업부는 더 많은 금액 쪽을 희망합니다라는 수용합니다.

두 번째 이차보전 3억 8000만 원 증액 부분도 수용합니다.

세 번째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이게 위기대응 지역에 대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진행해 보고 그러면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할 필요가 있는지를 좀 진행해 보면서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지역의 위기 부분 쪽을 대응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견과 중소기업 쪽으로 그렇게 차등을 먼저 두고 시작하는 것보다 구분 없이 시작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지금 이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몇 개나 돼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지금 현재는 올해 5월 1일에 지정된 여수가 있고요. 추가 지정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게 지자체장, 광역단체장들이 요청을 하고 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아직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시다만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게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관련한 그거하고 유사한 거고 그게 일몰되고 지금 이게 진행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아닙니다. 지금 여수에 대해서는 바로 이 추경이 편성이 되면……

○구자근 위원 아니, 산업부에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이라고 오래전부터 어려운 지방산단이나 어려운 부분들 이런 형태로 지원했었는데 그게 일몰되고 이렇게 지금 지역산업 위기대응, 다른 이름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선제위기대응지역이 하나 있고

특별대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선제위기대응지역에 관련한 지원 내역사업들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부분들도 이런 형태로 계속 지원을 가게 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중기부 사업하고는 어때요? 계속 저는 이게, 중복적으로 지금 나가게 되는데 오히려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중진공에서 받아서 진행해서 금액도 크고 이자 보유율도 낮고 이런데 굳이 지금 이 형태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어렵지 싶은데.

지금 범위는 정해졌나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이 좀 답변 드려도 괜찮으신지……

○구자근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입니다.

저희가 190개사 정도로 잡았고요, 1개 지역당. 이번 연도에 한 3개 지역이 지정된다고 가정을 해서 그래서 3% 이자 이차보전……

○구자근 위원 아니, 그냥 막연하게 190개라고 정해서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협력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구자근 위원 그걸 대상을 끊는 걸 어떻게 끊습니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신청을 받는 선착순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걸 놓치는 부분도…… 더 어려운데 선착순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이걸 추정 부분인 거고 당연히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 지원 요청한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들을 저희 부 총괄로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외에 이번 하반기 추경과 관련된 것만……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동의는 하고, 이 추경 금액이 확정돼서 집행이 되더라도 저는 위기대응 관련 지역 지원 관련해서 지원 대상 판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 지금 추경을 해서 가도 집행하는 데 요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중기부하고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자 수요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내년도, 26년도 당초 예산할 때 저한테 다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스태프는 이거 딱 해 봤다가 따로……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차관님, 이차보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벤처진흥공단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게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예,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이걸 산업위기지역에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면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이 가능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그런데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그걸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왜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시다.

○서일준 위원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더 어려운데 조건 맞추기 더 쉽지 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위기지역의 기업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쉬운 길은 놔 놓고 우리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양쪽 다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류하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중기부 쪽의 사업은 산업위기대응지역에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일준 위원 다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수다 그러면 여수의 이차보전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중기부보다 저희들이 좀 더 완화된 이 법에 관련된 것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부 것보다는 좀 더 지역 쪽에 있는 기업이 접근하기가……

○서일준 위원 그러면 중기부도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산업부도, 이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건 일반 트랙인 거고 이걸 특별 트랙으로 산업위기 대응……

○서일준 위원 이중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한쪽이 지원이 되면 당연히 이쪽은 지원이 좀 더……

○서일준 위원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한 캡이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이차보전 말씀하시는……

○서일준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그것까지 제가 잘……

○서일준 위원 10억이잖아요. 10억이고, 지금 산업부에서 하는 것은 5억밖에 아닌 겁니다. 오히려 공단에서 하는 금액이 더 많은데 2개 중 하나만 한다면 보니까 공단 것 하겠네요, 어려운 기업들은? 그래서 이것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중진공의 일반 트랙으로 하는 데들은 일반 트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건이 저희들보다는 신용도니 뭐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저희들 위기대응지역 쪽에서 하는 쪽은 그 위기대응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건이나 그런 것을 부여할 수가 있어서……

○서일준 위원 별도로 자료를 한번 봅시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이차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복 지원이란 게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한쪽에서 이차보전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 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차피 금리 차액을 보전하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일부 일종의 정책적인 스킴이 겹치더라도 실제 지원이 중복될 가능성은 아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다양하게 지원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게 사실 더 좋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들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차보전, 특히나 위기지역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후에도 지자체들을 확대할 계획을 산자부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고 이후에 구체적인 보고를 들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33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밑의 3억 8000억은 딱히 이견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부대의견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일종의 정책 집행을 해 보고 추후에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게 산자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은 빼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3번입니다.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산업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한 산업위기대응 체계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전 주기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30억 49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3번 사업 30억 49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애트 1번.

차관님 바뀌지요? 잠깐 기다렸다가……

차관님, 일단 인사부터 간단하게 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령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실장에서 2차관으로 댔습니다.

그동안 에너지정책을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만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에너지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앞으로 정말 맡겨진 사명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투 1번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번입니다.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입니다.

내역사업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 기반구축은 당초 2026년 12월에 센터 구축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장비 도입 등을 위해서 137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공동개최는 25년에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먼저 시험평가장비 구축 예산 증액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소포럼 개최 관련에도 증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증액 의견 동의로 정리하고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번 폐광대책비입니다.

내역사업인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조기폐광지역의 경제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54억 4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수용합니다.

다만 현재 예산을, 의견을 주신 것은 태백하고 삼척 지역 경제진흥사업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화순군에도 예산이 좀 필요해서 저희는 같이 합쳐서 256억 원을 증액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256억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256억 40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위원장이니까 동의합니다.

○허성무 위원 동의합니다. 이것 해야지요.

○구자근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화순까지 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강승규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세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이 사업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보면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입법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있습니다. 석탄을 조기 폐지,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적으로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내 주신 법안들 중심으로 해서 세밀하게 지금 검토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아무래도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 공정한 전환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보고 싶은 것은 기본설계비랑 실시설계비의 동시 편성이 절차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내용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돼 있어서, 절차적으로 둘다 같이 담을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256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의견을 췌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6억 4000만 원, 특히 태백·삼척·화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증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력산업기반기금 1번 사업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1번입니다.

원자력 분야 지원입니다.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감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원자력 분야의 필수적인 연구개발 및 산업 생태계 지원 예산의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산업 기반 증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균형 있는 에너지믹스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 2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성무 위원 동의하는데 잠깐만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어디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잘라진 것인지 아예 요청이 없었던 것인지 그것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9번에 보면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반영될…… 이제 논의를 해 봐야 되지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추후 논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부대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SMR 제조부품시험검사 지원센터 신설에 대해서도 저희는 초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절차적인 것 정리를 조금 하고 가고 싶은게요, 일단 이게 추경안에도 없고 다른 증액 의견도 없는데 부대의견만 이렇게 논의하는 게 가능한가요, 수석전문위원님?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보는 거예요, 없는데 갑자기 부대의견이 있으니까.

○**소위원장 장철민** 의사일정에 이렇게 잡히는 게 절차적으로 가능한지 정리를 하고 내용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가능한 한 거예요?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경우에는 부대의견만 이렇게 추경에서 논의하는 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가능합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지금 9번의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이것 작년도 본예산에서 증액하기로 했다가 예결위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증액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결국은 9번에 원자력과 관련해서 증액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1번과 같이 이렇게 부대의견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부대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부대의견은 마음껏 낼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허성무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이 해당 부대의견에 대해서 서왕진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왕진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부대의견의 맥락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첫 번째 부대의견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감분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의 예산집행 자체가 지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전제를 우선 해 놓은 것이고 실체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깎여서 굉장히 줄어든 상황인데 그게 비효율적이고, 그걸 절감분을 마련해서 원자력을 지원해야 된다는 전체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부대의견이지만 이 자체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아 위원** 그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가 없었습니다만 이 원자력 분야 지원 관련해서 왜 증액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좀 의아스럽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글로벌경쟁력 속에서 맞춰 가야 된다는 부분들은, 방향성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과도하게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저는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AI나 데이터센터나 앞으로 전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나 이걸로 해서 우리가 다 충족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에너지믹스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은 안 되고 어느 한쪽은 되고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자구나 문자를,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일회일비나 논의하는 것보다는 산업부에서 큰 틀에서 좀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웅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면 원칙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믹스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정책 전반을 다루고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대의견의 논지가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절감분을 가지고 늘리자라고 이야기하는 논지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보면 정반대 현실인데 오히려 그것을 정반대로 달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부대의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저도 좀 의견을 드리면요, 일단 부대의견 2개가 이게 무슨……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도 않은데 부대의견 2개가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1번 원자력 분야 지원(총괄)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그런데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지금 절차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신재생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여기 예산목의 범위를 뭔가 넘어서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부대의견 정도만 남겨서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첫 번째 것은 원래 있는 사업 분야를 넘어서는 부대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그냥 두 번째 부대의견 정도만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어떠신가요?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부대의견을 낸 당사자 위원이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하기가,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김동아 위원 그렇게 무슨…… 부대의견인 정도인데, 예산도 아니고.

○구자근 위원 아니, 부대의견이니까 전체 의견 속에서 혹시라도, 전체 의견은 전체회

의에서 진행하도록……

○오세희 위원 두 번째가 다 포괄적인데 두 번째 하시지.

○소위원장 장철민 그냥 두 번째 부대의견으로 정리하시지요.

○오세희 위원 포괄적이예요.

○소위원장 장철민 왜냐하면 이게 신재생 관련된 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면 제가 토론을 더 해 보자고 할 텐데 이게 원자력 분야 지원(총괄) 사업에 부대의견 붙어 있는 거니까……

○강승규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우리 야당이 통 크게……

○허성무 위원 상호 존중하고 가는 게 좋아요.

○소위원장 장철민 통 큰 야당의 동의로 두 번째 부대의견만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업.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5쪽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잠깐, 잠시만요.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화를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같은 산자위원이고 하니까……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이것은 정리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업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번 전력효율향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역사업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은……

○정동만 위원 나경원 위원이 아니어도, 어느 위원이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웅 위원 공통된 의견이에요.

○정동만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3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역사업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은 민생 안정과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를 통한 상생 성장을 위해 가전제품 구매뿐만 아니라 렌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은 지역 간 편중을 완화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소득 수준에 따른 형평성 및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역사업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시행 전 일부 가전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서 철저한 가격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비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역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대해서 원안 유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대 의견에서 첫 번째, 렌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구독경제에서 렌탈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취약계층과 소득 수준에 대해 차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라는 부분도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시행 전에 가격의 인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준비를 해라라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전 국민 대상 하고 선착순으로 해 주는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 국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합니다.

○구자근 위원 여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금 몇 프로지요, 2.7%입니까? 전기요금에서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이것 비율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3.7%……

○구자근 위원 아니, 그것은 전에 3.7%에서 계속 낮춰 달라고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2.7%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2.7%로 내려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구자근 위원 그러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다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기요금에 부과해서 같이 내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전 국민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전기를 쓰는 누구더라도 이것은 내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려고 치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받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이 사업은 원래……

○구자근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로부터 거둬들인, 그 전력기반기금 2.7% 포함된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그와 관련해 갖고는 현재 고효율 제품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할인하는 지원 계층—그러니까 취약계층입니다—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25억 원을 책정을 해서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별도 사업이 있고요. 지금 이것은 경기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 진작을……

○구자근 위원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것이지요,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2020년에 했었고요, 이천십……

○구자근 위원 지금 5년 만에 하는 것이지요, 추경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5년 만에 합니다.

○구자근 위원 한전도 적자인데, 20년도에도 똑같이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이것은 사실 한전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력기반기금과 전기요금은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전 예산……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그 전력기반기금 속에 예를 들어 가지고 취약계층들이 내는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기요금하고 별개입니다만 예산……

○구자근 위원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2.7%에 전기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 취약계층 포함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 요금도 포함된 그 돈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특히 어려운 사정들, 취약계층들 그분들 전기요금세에서 받아들인 것들 모아 놓은 돈으로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현재 전력기반기금 별도 사업이 있고……

○구자근 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이 사업의 목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자근 위원 부대의견 속에 지역 편중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지방이 많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 많을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보면 수도권이 50% 정도 됩니다만 인구구성 비율로 보면 전반적으로 인구구성이 수도권에 50%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방은 발전도 안 해야 되고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지, 인구로 그렇게 따지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에 우선적으로 예산, 지방에 있는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방에서 우선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부가적인 제도적 장치는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인구로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가전제품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 혜택을 받아 가면서 쓸 여지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대의견들을 잘 참고해서 이왕이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가전 효율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독거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지원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장철민 이재관 위원님 하시지요.

○이재관 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 갖고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면 수요 관리 차원에서도 우수 효율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전기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정책 취지가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단순히 수요 관리뿐만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해서 수출경쟁력, 그러니까 세계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그 재원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어떤 사업으로 이것은 중단하고 간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스타트업의, 신규 사업의 확장, 창업의 확장이라든지 벤처기업의 활성화라는 부분하고도,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도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실제로 예를 들면 전기밥솥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벤처로 시작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특히 우리 가전산업이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활력이 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강승규 위원님 하시고 서왕진 위원님 하시지요.

○강승규 위원 전체적으로 저도 부대의견 등에 동의하고요.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대상에 정수기를, 지금 가정에서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수기니까 정수기를 포함하는 것 등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위원도 여기에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기업, 특히 대기업 등이 가격 조정을 해 가지고 실제 그 이익이 다 대기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가격을 올려 놓고 10% 깎아 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정책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격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아까 구자근 위원님 의견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호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되 대기업 관리, 가격 관리 잘하시고 또 혜택 대상에 정수기를 꼭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수기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은 고효율 제품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전기 효율화, 에너지 효율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사실은 포함 대상에 11개 가전을 포함시킨 이유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에너지효율

등급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마 정수기는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인데 저희가 일단 효율 등급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정수기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아까 구자근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부대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경기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또 호응이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이 정책의 효과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5년에 한 번 단속적으로 해 가지고는 분석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할 때 정확한 효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매우 소득역진적인 정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120몇억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3000억이 넘는 이런 정도의 큰 금액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소득역진적인 정책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할 때 꼭 효과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 방안과 함께, 사실 소비효율등급을 촉진하는 에너지정책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정책이니까 아까 이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이 먼저……

○구자근 위원 자료 요청, 자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 3260억 관련해서 금액 산출 근거 자료 좀 주시고, 그 내용 속에 보면 환급하려고 그러면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고객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지금 신청서류 같은 것 검토해야 되고 이런 인력 운용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명, 120명, 150명 이렇게 산출 근거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추경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면 지금 빨라야, 진행해도 지금 한 거꾸로 해도 6개월 정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산출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것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감사합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 가전제품 회사를 위한 정책 아니냐, 서민들보다는 부자들하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한테 혜택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가전제품 회사들에 일차적인 혜택은 있습니다. 다만 가전제품에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중소기업들이 요즘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전체, 직접적인 효과만 해도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다고 해도 서플라이체인 자체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은 이렇게 서플라

이체인 전체적으로 볼 때 중소·중견기업까지 내려가는 혜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소비자들한테는 일단 소비를 저희가…… 우리 가전제품의 소비탄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전제품에 대해서…… 하여튼 비싼 소비재 같은 경우는 소비탄력성이 상당히,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가격탄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도 기왕에 고효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단지 좀 어렵다, 그다음에 지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3200억 지금 추경 했잖아요. 이 정책을 내년에도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만에 이번에 다시 시작을 했지만 성과라든가 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적 문제, 그다음에 가격인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만약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지속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저는 만약에 앞으로 계속한다면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 운영비 16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잖아요.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시스템 구축을 아까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3개월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전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한 160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이게 저희가, 사실은 노령층이라든지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에다가 아예 노인분들이, 노령층이나 인터넷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직접 대리점에서 구매할 때는 대리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한테 좀 반영……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을 관리비를 좀 줄이면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아무튼 지금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게 정말 우려했던 그런 내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오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인가요? 1차, 2차 나누어서 두 번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한 300억 정도 예산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범사업 검증 결과를 거쳐서 그다음 해에 대규모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다섯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훈련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잘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부대의견이 나왔던 거는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이 큰 예산이 조금 더 소득에 따라서 잘 배분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경기부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대기업, 특정 기업 몇 군데를 위한 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속에 가 보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까지 다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 또 할인을 받은 사람은 그 할인 받은 것에 대한 기분으로 그만큼의 또 다른 소비지출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인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맞는 제도라고 보고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후에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프로그램을 짜 달라 그런 요청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사업이 설계가 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산중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소위원장 장철민 다 비슷하신 말씀이세요.

○정동만 위원 아니, 비슷한 이야기인데 2019년도에 할 때는 대상자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에 한해서. 그렇게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만큼 예산을, 3000억 정도 더 늘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19년도에서는 아무래도 300억 정도, 계상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서 일단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경기 진작이라든지 전 국민의 소비 진작 이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조금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20년도에 3000억 규모로 동일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거하고 2020년에 동일하게 3000억을 했었고 사실 경기 진작 효과가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3조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성장 동력에서 주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소비 측면에서, 저희가 소비 부분을 GDP 성장을 반영을, 잠재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갖고……

○정동만 위원 부대의견에 보시다시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오겠지만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지속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추경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보시고 이후에 성과 평가를 해서 다음에 본예산에 더 하거나 하는 거는 추후에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대의견 세 가지 꼭지 모두에 대해서 다들 의견이 공히 비슷하시니까 부대의견을 이렇게 남기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 3건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오전 논의는 여기까지 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3번 항목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장철민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16쪽입니다.

3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입니다.

먼저 동 사업에 대한 추경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11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022년도 예산 수준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1532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정량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상당히 많이 축소돼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4.9GW 중에 태양광이 한 3.5GW 되는데 이 정도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118억 정도 정부안을 좀 승인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재생에너지 생산량, 이런 정량 지표로 성과목표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출력제한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이걸 이제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서로 간에 또 첨예하게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되지 싶은데.

여당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아까 모두에 또 그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이

걸 통째로 그냥 보류해서……

아니, 이걸 여기서 우리가 삭감했는 거나 증액했는 거나 이 부분을 여기서 결정해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뭐 저쪽 우리 국회 상임위로 가서 넘겨서, 여기서 뭐 왈가왈부 하나씩 다 짚게 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지 싶은데 어떨지 한번……

○소위원장 장철민 그래도 해야지요. 논의를 해야지요, 이것.

○김동아 위원 아니, 상임위 가면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구자근 위원 그래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방향성은 전체적으로 아까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함께 방향성을 같이 가야 되는데, 속도와 시기 또 전체적인 예산 규모 이런 걸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풍력이나 다른 예산은 없고 추경이 오로지 태양광 이것만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들 국내 제조업 기반 관련해서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인 건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이 어려운 시국에 국채를 내서 추경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추경을 하면서 수혜받는 쪽이 어디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우리 그리드를 탄소중립 그리드로 좀 더 나아가도록 하는 데 일정 정도, 탄소중립 감축이라든지 해서 일정 정도 국민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구자근 위원 차관님, 겉으로야 탄소중립이고 RE100이고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시장 확대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웨이퍼나 잉곳이나 소재나 전부 다 붕괴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이 사업은 탄소인증제가 원칙적으로 적용, 탄소인증제는 국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자근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피해 가지 마시고 태양광 전체를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자 단독, 조선비즈에서 단독 보도됐는 게 하나 나왔는데 서울 회생법원 웅진에너지 파산, 그렇지요? 지금 중국 저가에 밀려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중견기업·중소기업, 다들 우리 국내 기업들 살리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원하자고 이야기하시고 심지어는 이차보전까지 해서라도 도와주자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은 이것 해 보면 태양광 관련해서 인버터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것 관련해서 지금 법안 개정안을 하나 발의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동료 박성민 위원님께서 전체 삭감을 했지 싶은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맞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지난하게 이런저런 논리로 서로 간에 이야기가 오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과연 중국산 저가, 대한민국의 태양광 제조업 붕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태양광 사업이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60%, 80%의 모듈이라든지 의존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키워 줄 것인가는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산중위에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당초 책정했던 예산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굴이 됐고, 추가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태양광이 평소 4GW 이상씩 보급을 해 오다가 최근 몇 년 동안 3GW 미만으로, 3GW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수요가 밀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서 일단은 초과수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인버터 관련해서 현황 파악 지금 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인버터는 라이드 스루(Ride Through) 기능을 갖고 있는 전압 보정장치와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전수조사 하고 전체 파악하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산자위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과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난하게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추경에 할 필요 없이, 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만 또 이렇게 옹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또 어디 가고?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1560억이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반영됐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초과수요가 있어서 한 118억 정도 증액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이미 애초에, 우리가 천몇백 억을 지금 이 추경에 담는 게 아니라 이미 본예산과 지난 추경에서 1560억인가요 이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침예한 대립 문제는 이미 그 단계에서 검토가 지난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지금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추가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취지가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2022년도에는 3200억까지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올해가 1500억으로 거의 2배 이상이 삭감이 되어 왔던 사업인데다가요 그동안 수요가 많이 누적이 돼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1564억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118억이 수요조사가 돼서 이것만큼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일정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자근 위원 일단 그 집행 실적하고 자료하고 좀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누구 혹시 또 의견 있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 태양광 설비 중에 모듈, 셀, 인버터 이런 게 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지요?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급 사업은 탄소인증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업만,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사실 이 사업에 들어가기에 어려울 정도로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중국 기업이 들어올 우려가 많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동만 위원 태양광 인버터 중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중단시키거나 또 시스템을 교란하는 킬스위치라는 부품이 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고 저희가 얼마 전에 직접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지에서 인버터는 교류에서 직류로,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하는 전류 변환 장치에서 실질적으로 백도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중에 침투해 들 수 있는 여지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인버터 부품들을 충분히 체크하고 가겠다는 말씀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히 좀 살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태양광 설치부터 가동까지 하려면 거진 10개월부터, 10개월 12개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맥시멈 1년……

○정동만 위원 그 정도 1년 정도 걸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정동만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성이 요하지도 않은 건데 추경에 예산 투입해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 사업은 이미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고요. 아마 추경만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업이 118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이 추경이 지금 민생 추경인데 민생 추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정동만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뭘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업계의 산업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웅진 에너지라든가 이런 파산 사태 많이 겪었고 전 정부에서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고 추가 수요에 의해서 118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자는 것이고 또 이것 자체가 중국 기업의 시장 확대 측면에서만 바라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갖다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추경은 원안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더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중국산 문제도 저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불확실성이 커서 이렇게 예산이 3000억이었다가 1500억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이러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도 예측 가능하게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경제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그리고 기금에서 이 정도의 시장을 창출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견조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국내 기업들도 가격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

아까 정부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어차피 태양광이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여야 없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차피 신규 수요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조사되어 있는 초과 수요 부분인데 이 정도는 그냥 원안 가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큰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3200억 하던 거 이제 겨우 100억 회복하는 건데요.

○허성무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답변 중에 중국 제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 비율이 10%, 통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마는 통계에 안 잡히는 잠재수요까지 합치면 10%가 조금 넘고, 10% 미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정도라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를 신속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걱정하시는 중국산 제품의 과도한 진출을 막아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차관님, 이번에 체크 원전 수주 성공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서일준 위원 정말 우리 산업 전체의 엄청난 쾌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추경에 보면 원전 관련해서도 예산이 정부 정책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전혀 없고 지금 전부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거의 중국산 제품이 들어올 것으로 확실히 되는 태양광 쪽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전 같은 경우에, 국산화 많이 된 이런 부분을 R&D 쪽에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한다면 이게 형평성이 맞을 건데 일방적으로 그냥 신재생 쪽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중국산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치가 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전 지원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원전이 작년 8000억에서 올해 예산은 9000억으로 1000억이 증가했습니다. 원전 예산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일정 정도 1000억이 증가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 다만 원전 R&D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사업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태양광은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1년 미만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 그다음에 대기 수요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점, 그를 통해서 일정 정도 추가 수요가 나와서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태양광 예산을, 밑에 금융지원도 1000억이 돼 있잖아요. 이게 죽 썬서 개 주는 거 아니냐, 이게 민생 회복하려고 추경을 하는데 태양광의 거의 80%가 중국 업체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거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물론 저희가 자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탄소검증제는 모듈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재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양광 제품들의 탄소배출량을 일정 정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나오면 저희가 조달을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을 사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국 기업들이 그 허들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해 봤기 때문에……

○서일준 위원 그 장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자료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장철민 더 하시게요?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산업이라는 게 지속성이 중요한데요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 산업이 잘하다가도 스톱이 되고 멈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빨리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태양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저가를 위해서 어떤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국산으로 돌릴 수 있게 지원을 폭이 크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산은 지금 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에도 다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보호해서 경쟁력을 갖추냐…… 더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 부분도 꼭 중국산 저가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다 좀 더 크게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태양광을 어떻게 거기서 제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게 안 하던 사업도 아니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118억이 증액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22년도에 3200억을 했는데 내려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데 이 사업을 주고 좀 더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내년에는 더 짜서 크게 지원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118억을 그대로 좀 지원하고 지속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박지혜 위원님 하세요.

○박지혜 위원 짧게 그냥 한 가지만 여쭙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 시장에서 중국산 패널이 더 싸기 때문에 보조가 되지 않으면, 그냥 시장에 맡겨 놓으면 태양광 패널은 그냥 중국산 쓰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태양광의 설비용량, 중국이 갖고 있는 설비용량 규모가 전 세계의 태양광 수요 용량보다 더 큼니다. 두 배로 큼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저가로 밀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최근에 중국에서 그런 저가로 한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에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 오겠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완전히 덤핑 공세가 앞으로 심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 국내시장은 조금이라도 국내 업체들한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가미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박상웅 위원님.

○박상웅 위원 차관님, 갑자기 2차관 말아 가지고 좀 부담스럽지요, 답을 다 해야 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저는 전공이 원전도 했지만 태양광도 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래요? 지금 차관님이 알고 계신 정보로는 국내에 지금 보급되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 듣고 있습니까? 태양광 패널이 현재 국내산으로 작년도, 작년 한 해 국내산이 몇 프로 공급되고 중국산이 몇 프로 공급되고 기타가 얼마나 개략 좀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국내산이 40% 정도 마켓셰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중국산이 한 60% 되고 기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이 되면 주로 정부에서 자금 지원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탄소검증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대부분이 국산 비율이 높고 특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들 중에는 중국산이 많이 차지, 가격경쟁력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2025년도나 내년도 사업에 국산 비율이 40%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예를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는 40% 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박상웅 위원 그러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이 118억이 들어가면 그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저희는 태양광 산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검증제라는 기준이라든가 허들 라인을 좀, 기준을 다시 재검토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공공 물량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단과 같은 공공자원들을 활용해서 공공 태양광을 확대하는 데 일정 정도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면 국내 조달 비중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책적으로 태양광을 공공 부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지금 패널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각종 여러 가지 주요 핵심 부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패널이 40%라면 나머지 주요 장치들, 그런 것들도 국산 비율이 한 40%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 합쳐서 40%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생태…… 저희가 이제까지는 태양광에 대한 모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정책적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태양광 산업 생태계 전체를 놓고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태양광의 산업 정책을 하겠다는 정책 준비를 저희 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러면 패널이나 기타 주요 장치가 실제로 국내의 기술로 만들어지고 국내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중국 자본도 들어와서 약간의 모호한 합작에 의한 국내 생산이라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실제 구체적인 기업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지금 시중의 국민들의 판단은 중국의 저가 패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시장이 확대되어서 더 이상 태양광 사업으로는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에 투자하면 할수록 결국은 중국에 이득을 다 뺏기는 그런 경향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우려가 어떻게 한두 번 듣는 이야기도 아닐 텐데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국내 산업을 이렇게 육성하고 있고 이런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태양광 사업을 하면 할수록 국내 산업도 점차 더 경쟁력을 갖게 된다, 데이터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왜 못 내놓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한화하고 그다음에 HD현대, 국내 기업들이 이 시장을 그나마 끈을 놓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협력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만 정책적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저는 태양광 산업은 다시 비약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생태계 강화 전략의 산업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실리콘 기반으로 하는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태양전지, 탠덤 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사업화할 수 있도록 뭔가 마켓셰어 자체는 저희가 더 이상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이라도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저는 여당 하다가 야당이 돼서 갑자기 철학이 바뀌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가 원전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요가? 그런데 태양광 이런 시스템으로는 들어가는 돈은 무자비하게 들어가는데 실제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차세대 태양광 산업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개발하고 치고 나간다는지 무슨 이런 비전 같은 게 아직 우리한테는 들어온 게 없어요.

사실은 태양만큼 우리가 미래에너지로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원자력 그래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산업화하고 실용화하는 이런 기술에 대한 미래 투자가 없는데 중국산이 이미 국내 시장을 덮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수치는 내가 정확하게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간다면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래서 아까 한화도 이야기하고 대기업을 이야기했는데 어느 대기업을 태양광 패널 개발이나 이런 장치 개발에 그렇게 주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점차 이러다가 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업을 접는 것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산이 거의 장악해 버리는 이 상황이 온다면 태양광 사업을 우리가 계속 더 확대해 나갈 이유가 없고 다른 전력 개발을 좀 하든지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가 확신을 가지고 산업 전략을 짜야 된다. 국민을 좀 설득을 시켜야 된다.

지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태양광 만들고 하는 거, RE100 해야 되고 좋은데 이게 전부 다 국내 혈세가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키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어 나간다면 국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개발을 한번 해 보십시오. 대안을 내놔야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 생태계 전략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래도 반도체산업들에 경쟁력을 갖고 있고 결국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태양광을 유틸리티 개념으로만 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쪽만 보다 보니까 생태계를 점유를 못 했었는데 이제는 태양광을 유틸리티 관점 플러스 산업 자체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사실 그 이전에 이런 정책들이 안 나와서, 이제는 그 준비를 현재로서 초안이라도 저희가 나쁜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 마지막으로……

○소위원장 장철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지금 태양광 산업 육성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고 여쭙보셨는데 사실 보급 정책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난 3년간에 신규 보급 용량 계속 줄어 가지고 한화큐셀이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했잖아요. 그쪽에서 보급 정책을 세게 하니까 우리나라 생산 용량이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보급 정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보급 전략과 그러니까……

○박지혜 위원 그리고 탠덤 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앞설 정도로 지금 한화큐셀이 기

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세대, 3세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보급 정책과 산업 생태계 전략을 같이 갖고 시너지를 갖게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 산업은 저희가…… 탠덤 셀은 실험실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면적으로 상용화의 시기를 놓치면 똑같이 실리콘도 중국한테 완전히 우선권을 뺏길 수 있는 위기의식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산업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창출을 해서 생산라인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신규 보급 용량이 줄어들면 생산라인도 폐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태양광 산업계 입장입니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박상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 부분을 국내 제품, 국내 제품에 대한 우선권을 사업 계약에 뉘 주는 그런 특별 조건을 달아서라도 국내 태양광 산업 자체를 그냥 가격경쟁으로 가지 말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내놓든지……

○**소위원장 장철민** 그 정도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희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일단 이견이 크기는 해서, 특히나 뒤의 신재생 부분도 있고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견이 이것에 대한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국산화율을 높일 것인가, 국내의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신재생 발전 정책을 더 잘할 것인가, 약간 이런 쪽으로 모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지금 준비하시는 것도 있고 추후에 보고를 더 해주시고요. 일단은 보류하고 이후에 다른 예산 사업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4번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용자)입니다.

먼저 동 사업에 대한 추정 편성은 부적절하므로 추정액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 생산 및 시설자금은 태양광 설비 외에도 타 발전원에 대한 실수요를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태양광의 계통 접속 한계를 감안할 때 추정액 대비 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50억 원이 아니고 5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은 2022년도 예산 수준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232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중심의 과도한 편중을 지양하고 다양한 발전원이 적정 비중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끝나신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중간에 내역사업 하나 빠졌습니다.

내역사업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용자는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RE10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20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아까 보급지원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2022년에는 5700억에서 2025년에 3200억으로 대폭 삭감이 좀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태양광 산업을 더 이상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정부안대로 1000억 원의 증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추정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접속설비 SPC를 구성하려면 공동접속설비 SPC 구성 사업자에 대해서 한전과 같은 그런 전기사업자로서 전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태양광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발전원이 적정 비중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지금 이것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당초 해서 5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올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돼서 아직 집행률이 확정적으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습시다만……

○구자근 위원 그 통계를 안 갖고 있으면…… 집행률 통계도 안 갖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작년에는 100%였고요.

○구자근 위원 작년에 100%? 아는데, 70억 불용됐는데.

2023년도에도 245억이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집행률을 묻는 게 추경에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와서…… 지금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국채 발행해야 되고 나랏빚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전체 금액을 맞춰서 사업을 맞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회예산정책처나 산업위 전문위원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수요나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이것도 보니까 앞엿것하고 연동되어서, 연계돼서 가는데 그것은 간사님들 판단……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이게 집행 문제가……

○박지혜 위원 지금 이게 민간 이자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추후에 정산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8%, 99%, 99%, 100%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일정 정도…… 저희가 사업집행률이 실집행률은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75%까지는 있습니다만 아마 전체 사업비 규모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보다 좀 떨어져서 실집행 금액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계획했던 사업들, 신청했던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올해 금액도 작년 신청 물량 대비 부족분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여기 근거가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작년에 신청을 했고 실제 실행했던 내용들을 비교·평가해서 추가적으로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5월 달까지 지금 기준으로 해서 실행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5월 달까지 실행행률은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여기 70%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70%입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실행행률은 인출해서 지원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지 집행행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퍼센티지를 높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실행행률이 5.7%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상반기에 집행기관에다 줘서 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70%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돼 갖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거의 연말이나 10월 달, 11월 달에 가서 발생하는 부분이라 시차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금융지원이라는 게 원래 지원하는 기관한테 가고 거기에서 사업자들한테 가는데 시차 발생 때문에 집행률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지원이라 사실 집행이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조금 해소가 되셨습니까?

○구자근 위원 아니아니, 지금 당초 예산에서 남은 부분들로 집행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남아서 저희들이 추경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명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끼고 나눠 쓰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사실은 저희가 올해 집행을 상당히 독려도……

○구자근 위원 뭐라도 돈 남으면, 우리가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국고가 넘쳐 나면 뭐라도 다 해 드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집행을 최대한 독려도 하겠지만 사실 올해 재생에너지 목표가 탄소중립에서 탄소 감축 목표로 해 갖고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총 4.9GW를 보급해야 됩니다. 거기서 태양광 한 3.5GW를 보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희는 이것은 최소한 반영돼야지 그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힘은 재생에너지를 반대하고 태양광을 반대하고 또 민주당은 원전을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원전이 필요

하면 인정을 해야 되고 국힘도 태양광이 필요하면 인정을 해서 에너지 대타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로 재생에너지가 필요 없고 태양광이 필요 없느냐 또 태양광의 상당 부품이 중국이 경쟁력이 앞서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해도 되느냐 하는 거지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원천기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미국에 로열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출할 때는 더 큰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또 그 기술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자위 내에서라도 위원님들끼리 에너지 대타협이 있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 서로 인정하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대타협의 마음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약간의 오해가 없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태양광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신재생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 태양광 사업에만 하는 금융지원은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사업처럼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금융 융자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신재생 사업자들이 시설 투자를 할 때 융자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어야 지금 시장에 있는 수요를 받아 줄 수 있는 거라서 이것은 금융지원 방식이니까 그냥 동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구자근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1000억 부분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아니고 오로지 태양광 시설자금에만 1000억을 넣는 겁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맞습니다. 다만……

○구자근 위원 태양광 시설자금에만 1000억을 편성한 거라서 에너지믹스 관련해서 다른 풍력이나 다른 여러 가지 수력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균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태양광만 1000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올해 저희가 원전 발전 비중이 30%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재생 비중이 10% 좀 안 됩니다만, 태양광 비중이 한 5% 좀 넘습시다만 상대적으로 원전의 발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 드리구요. 상당히 원전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은 좀 같이 높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또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감안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적어도 다른 나라 태양광 재생에너지 비중보다 우리가 아직 좀 많이 낮은 상황에서 일정 정도 우리가 안정적인 믹스로 갖고 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키워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게 원래 한 5000억이 넘던 예산이 2000억 이상 줄었던 사업이라서 그냥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견이 첨예하니까 보류해서 추후에 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5번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번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입니다.

먼저 동 사업에 대한 추정 편성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1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 중 일반사업비의 창업 및 사업화 협력 예산은 24년도 결산 내역을 볼 때 불용액이 2억 2400만 원이므로 추가된 예산 1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 사업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 과학기술 발전 기반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 기관고유사업비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정착 기반 마련 및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서 8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 장비·시스템구축비는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장비 예산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업 및 사업화 협력 등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특히 전력과 에너지가 앞으로 국가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이제는 됐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 정부가 이번에 원래 한국에너지공대에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올해 편성이 100억으로 깎여 있는 상황에서 100억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을 해 주신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1.8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불용 사유로 특히 관련된 사업과 신소재사업화플랫폼 구축 사업인데 이것은 대학 지원 사업과는 좀 별개로 다른 사업에서 이런 불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학 지원 사업에서는 불용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담자라는 의견은 사실 연내에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딱 100억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 이 사업의 경우에 100억이 삭감된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다시 부활시켰는데, 그 당시 직원 월급이라든지 또 법인카드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또 방만한 운영이 매우 문제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특히 이 비슷한 사업 예산 집행률이 보니까 70%밖에 안 되고 또 30%도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100억 정부 예산뿐만 아니고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 지원과 또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한전공대의 예산을 보니까 아주 허술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게 많이 있지요, 한전공대 자체 예산 전체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초창기 때 신규 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담당하는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일제적인 감사 작업을 벌여서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 회계 부실이 있었는지, 부족한 부분인지를 철저히 점검해서 이와 관련해 갖고 당시 에너지공대 총장이 사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 책임자를 선임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조직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제는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저도 행안위에 있을 때 제가 ‘한전공대가 예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허술하고 한데, 지금 보니까 예산 100억에 장비 도입 건도 있는데 계약 체결만 해도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리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달만 지연되면 불용 처리돼야 될 건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이번에 한전공대에서 예산 올린 장비들은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 몇십억 이상 고가의 장비들이 아니라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고속 픽셀화 검출기처럼 일정 정도, 중간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지금 실험장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불용 사유가 있음에도, 사실은 2023년 불용이 있던 당시 2022년부터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백스코·빅스포 사업, 부산 엑스포 사업을 저희가 준비했다가 그게 하는 수 없이 취소돼 갖고 불용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작년의 불용 사유는 특히 기간 심사가 많이 지연돼서 특히 출원을 하는 데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 안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책정한 대학 지원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달았는데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꼼꼼하고 면밀한 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 예산이 시급하고 이런 게 없어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물론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에너지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편성했던 사업은 학사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최소한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비 구축 이런 것들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사실 현재 돈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적어도 정부가 약속한 부분 200억 원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학교 창립이 언제 이루어진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2022년에 창립했습니다.

○이재관 위원 22년에 창립이 됐으면 글썄요, 말씀 들어 봤을 때 사실 국가 예산의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투명하고 아주 계획성 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초기의 어떤 사정을 감안한다면 200억 지원을 했다가 100억을 지원했을 때 그러면 이왕에 투자한 100억에 대한 그 효과성은 담보가 될 건지 또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게 정부에서 200억을 주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한다면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난감한 사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를 들어서 향후 정부에서 2022년에서부터 5년간 2027년, 2028년까지 200억 원은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그에 맞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학사일정들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강의실, 그에 맞는 교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지금 교사는 계약이 돼 가지고 교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들도 실험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발주가 돼 가지고 지금 실험실 장비도 좀 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갑자기 100억이 삭감이 되면 기존에 계약했던 부분들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건물을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그 지역 건설회사라든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서 애로사항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아까 걱정하셨던 장비·시스템구축비 35억이 불용 처리가 되나요? 계약이 되면 그건 불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계약이 되면 당연히 정상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이 부분은 22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도 초기 단계라고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앞으로 어쨌든 학교에 대한 집행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집행 관리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감사기관에 대해서는 완전히 세팅시켜 났고 그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산업부가 감사실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준비는 제도적으로 다 마련했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장철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가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금 차관님께서 증액에 대한 것은 제쳐 두고라도 약속되었던 200억 중에서 작년 예산안에서 100억이 삭감되어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대전환 시기에 중요한 인재를 키우는 그러한 학교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더군다나 장비가 없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제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로서는 그만큼의 손실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데 보니까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데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하면 4개월이 걸리는데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 요청에 대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것 학생들 이미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학생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지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잘 보완하려고 지금 산업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 이미 선발했고 교육 중에 있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교육과정이 부실해진다면 그거야말로 국가적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장철민** 통 크게 하시지요, 통 크게.

○**김동아 위원** 이것은 여야 문제 그런 건 아니고 감사 문제는 확실하게 지적할 문제는 맞겠는데……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일준 위원님 하시고.

○**구자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설립부터 반대했었습니다. 이것 설립할 때부터 난맥상이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22년도 설립 그 당시에도 한전이 적자가 한 22조 났을 때 한 711억 들어갔고 23년도에 한전 적자 한 40조 날 때도 1500억, 16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출연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2027년, 28년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28년까지입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31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계속적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28년 이후부터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전 적자 구조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1조 이상이 한전공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광주과학기술원이나 대전의 카이스트나,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에너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충분하게 주변 지역에 그렇게 인프라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학 4분의 1이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가는 지경에도 지금 이렇게 국가의 재정이, 한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1조 이상을 투입해서 계속 밀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학생들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시설·장비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광주과학기술원이나 카이스트나 통폐합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당시에 광주과학기술원이라든지 카이스트 대학이라든지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검토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당시에, 제가 당시에 전력국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가가 카이스트나 과기원하고 좀 차별화된, 특히 그쪽에서 다루기 어려운 에너지AI 그다음에 차세대 그리드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과기원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도 없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이 있어……

○구자근 위원 1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왜 그거는 안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희가 에너지 패권 시대에서 국가의 이 정도 최고급 인력을 우리나라가 양성해 내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적응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이 대학은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

저희가 원래는 정원이 대학생이 400명이고 대학원생이 600명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고,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대학원생은 150명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대학원 중심으로 완전 최고급 인재 양성으로 가 줘야 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원생을 이 정도밖에, 150명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서일준 위원님 아까……

○서일준 위원 한전공대, 한전에서는 출연하는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700억 정도 출연합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한전에서 원자력대학원대학교에 출연 다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원자력대학원의 초창기 때는 일정 정도 출연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설립이 되고 나서, 기간이 지나고 나서 R&D 과제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일정 정도의……

○서일준 위원 출연금 미납한 걸로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서일준 위원 이번 추경 목적이 돈을 좀 빌려서라도 민생 회복 좀 시키자, 경기 진작 하자인데 한전공대의 학생들 해 주는 것, 그 당위성은 맞지만 이 추경의 목적하고 얼마나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지방의 대학교는 살아남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 대학 빼고 지방대학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제에 한전공대를 새롭게 만들었으니, 차라리 예를 들면 전남 공대라든지 인근에 전북 공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과학기술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건데 이걸 대통령 공약이라고 그냥 밀어붙여 놓으니까 이게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생들을 불쌍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앞으로 또 더 줄어든다면 한전공대 폐교해야 될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 그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학생들만 바라본다면 말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틀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소위원장 장철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서일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전에너지공대 같은 경우 사실은, 전남대 공대나 다른 지방의 국공립대학교들이 지금 현재 신입생 모집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그것이 현실이고 통폐합이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것도 맞습디만 카이

스트처럼 에너지공대는 그러한 전문·집중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목적 자체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입학해 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돌려서 이 학교에 대해서 재고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장비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또 하나의 학습권이 피해를 입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 한전에서 매년 그렇게 1800억 정도를 계속 출연해야 되는 문제, 이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후에 더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지금 추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민생 추경이라고 하지만 이 학생들의 입장, 한국에너지공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100억 정도가 핑크가 나는 이 상황에서는 운영에 굉장히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도 한 번 더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추가적으로 에너지공과대학은 사실 2021년도 에너지공과대학법안을 여야 합의해서 통과되었던 법안입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이 대학의 설립 목적이 맞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번에 민생 추경은 민생 추경이니까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AI가 상당히 시급한 국가적 과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AI를 확산시키고 AI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이번 추경에 담겠다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특히 AI와 에너지는 매우 긴밀합니다. AI가 에너지의 절약을 도와주고 에너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또 AI가 소모되는 에너지와 전력들을 에너지가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공과대학에서 에너지AI 부분은 저는 상당히 매우 중요한 인력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본원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더 하셔야 되겠어요?

○서일준 위원 예.

○소위원장 장철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일준 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이게 민생 추경이잖아요, 경기 진작이고.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금 남부내륙철도 감액 500억을 했습니다. 가덕신공항 감액 5000억 했습니다. 이 감액 500억, 5000억 해 가지고 태양광에 지원하고 한전공대에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차관님한테 드릴 이야기는 아니고 예결위 가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민생하고 시급하냐. 있던 예산도 몇천억씩 그냥 까 버리고 남부내륙철도도 지금 500억이나 삭감시키니까 과연 되겠느냐, 물론 국토부 소관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웬만하면 원안 해 주시지요.

이게 저희가 원래 개교 이후에 200억 정도씩 지원하게끔 사실은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계획에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에너지 전문가, 특히나 굉장히 젊은 전문가·교수들 집단이 저희 대전지역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교수들이 이 에너지공대로 많이 이직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원래 계획돼 있었던 지원들을 거의 못 받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훌륭한 전문가들인데 연구 성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씨앗을 다 몰아서 심어 놓고 탄압하고 감사하고 물 안 주고 하면서 사실은 말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냥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구역량의 성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원래 계획했던 수준의 지원은 해야 된다. 저희가 이거 200억 지원하자는 게 원래 없던 얘기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최고 연구자들이, 최고의 대학이 원래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 수준의 연구라도 좀 하게 해 주자라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압받던 것 그냥 보통의 환경이라도 조성해 주자라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막 정치적인 경쟁화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200억 회복해 주는 수준으로 추정 원안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것 정치적으로 너무 논쟁하는 건 바람직한 것 같진 않거든요.

○**김동아 위원** 정부를 떠나서 산자부 차원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구자근 위원** 지금처럼 이 예결위에서 이야기 나오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런 취지이고 그런 것이었다면 지난 25년 당초 예산 다룰 때 왜 100억으로, 깎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구책 마련해서 100억으로 제시했고 거기에서 이 정도 100억 같으면 올 한 해 살림은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100억을 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위원들이 누군가가 200억을 100억으로 깎자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전 자체에서 자구책으로 어려우니 우리가 100억으로 해서 일단 올 한 해는 살림을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 100억이 왔는데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장철민** 잘 못 살고 있다니까요.

○**구자근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허성무 위원** 아니, 애들 교육만큼 제때에 장비와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인력들 모아 놓고 좋은 인재들 모아 놓고 해 줘야 될 지원을 안 해 줘서 낭비한다는 건 정말 국가적인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것 물론 맨 처음 태동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이들을, 그것도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서 최고의 교수진들이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지원해 줄 것 해 줘서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구자근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깎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허성무 위원**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지금 절실하게 대학에서 장비들을 필요로 하고

교육과정에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니까 좀 전향적으로 도와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작년 말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최대한 줄여서 구조조정해서 갖고 오려고 노력했었고 한전도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었고 에너지공대도 나름대로 총장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겪으면서……

○구자근 위원 그것은 본인이 해임될 만한 사유를 갖고 있으니까 해임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정 정도, 당초의 사업 목표는 200억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200억을 토대로 해서 건물 올라가고 있었고 실험 장비 들어오고 있었고 학사일정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200억이 없는 상태에서 마른 수건 다 쥐어짜고 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제대로 해서, 감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사업들은 증액 의견을 참 쉽게 내는데 이거는 그냥 원안 해주시지요. 안 될까요, 야당 위원님들?

○구자근 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박성민, 정동만 두 분이 삭감을 했는데.

○권향엽 위원 한 가지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2년은 250억, 2023년은 250억 했다가 2024년은 200억이었고 작년에는 100억으로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0억으로 예산안을 했을 때는 100억만 해도 되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회계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 지적 이런 것들도 있고 감사의 문제도 있고 총장 사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한전의 누적 재정적자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예산편성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100억으로 한 것이지 100억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100억인 것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산업부의 확고한 입장은 200억을 그대로 가는 것이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에너지공대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의 편성권에 있어서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다만 저희가 10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에 설득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작년 예산을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반영이 안 되고 100억에서 종료가 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자,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전체회의에 들어가지를 않았고 예결소위 바로 와서 이런 사항을 접하는데 저는 처음에 한전공대 설립할 때부터 반대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른 취지로 적어도 1조 원을 투입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충분하게…… 굳이 한전공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하게 주변의 인프라나 학생들, 젊은 친구들 봐서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집행을 하게 되면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다 되어 있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돈도 안 받았는데 무슨 계약을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미리 선제 계약을, 200억을 전제로 해서 계약이 이미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 돈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계약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지금……

○구자근 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계약을 맡주했던 발주처가 일정 정도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린 겁니다.

○구자근 위원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돈도 없이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페널티를 물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원래 계약이 진행된 게 매년마다 한 게 아니라 저희가 4년, 5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별로 4년 로드맵을 갖고 계약을 중간중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근 위원 집행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지금 전화를 세 통 했는데 당사자가 안 받네요.

○허성무 위원 구자근 위원님, 우리가 설사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다 해도 그 아이를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한전공대의 탄생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태어났고 지금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교육과정이 알차게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그거야말로 국가적 인력 낭비이고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감액 의견을 내셨지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런 정도는 챙겨 주시는 게 맞다. 거기에 지금 15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있고……

○소위원장 장철민 통 크게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자근 위원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고……

○강승규 위원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강승규 위원 구자근 위원님의 지적에 저는 이렇게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당초 200억 목표로 장비 등을 계약 내지는 구입을 여러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본예산에 100억만 잡힘으로 인해서 사실은 나머지 절반은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뤄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0억을 안 해 주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은 차관님이 너무 유치해서 제가, 그것은 그렇게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허성무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한전공대에 대해서 많은 시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등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

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좀 해야 되겠다는 정부가 의지를 밝히면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한전공대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정말 당초 목표대로 어떻게 에너지 분야에 뭘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입장만 낼 게 아니라 한전공대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분야의 연구가 아직 안 되면…… 아까 뭐 약속을 해서 지역구에 있는 교수들이 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한전공대가 가져올 수 있는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이런 우리 야당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 줘야 돼요.

한전공대가 갖는 비전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여기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을 해야지 그저 그냥 어떤 부분에서 투자를 했고, 출발했고 돈 안 들어갈 수 없다 하면 그런 논리로는 더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실장도 하셨고 지금 차관으로 오셨으면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일정 정도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데이터와 뭐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가져 줘야 저희는 이것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니까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원안 유지로 넘어가도 되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진짜 대승적으로 원안 유지에 동의를 해 주신 만큼 오늘 주신 여러 우려 지점들 산자부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번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입니다.

먼저 동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이 부적절하고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동 사업은 당초 계약 대비 25년도 계획액이 10억 원 삭감되어 제조 기반 구축과 핵심 장비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동 사업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추진을 위한 장비 구축비 등이 필요하므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태양전지를 중국에서 실리콘 기반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편성한 10억 증가분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원안 유지 의견이신가요? 여기 밑에 10억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허성무 위원 원래 이게 20억을 해 주기로 한 건데 10억이 깎여 가지고 10억만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의견처럼 이것은 오히려 10억 증액을 해 줘야 되

는 거예요.

아까 밀양의 박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한테 기술이 밀리거나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차세대는 빠르게 지원해서 빠르게 중국을 앞서갈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비 지원도 빨리해 주고 빠르게 이걸 오히려 진행해 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게 더 미뤄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동아 위원** 특별히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안 해 준 이유가 있나요?

그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장비만 구입하면 충분히 차세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조성된 상황인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본인들도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심정을 너무 토로하더라고요.

산자부도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내용을 저희가 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만 연구재료비라든가 연구활동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사업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10억 원을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면적 평판 코터 장비라든가 라미네이터라고 이게 한 3억 원 이상 드는 장비들이라서 다 합치면 한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조달청의 장비 심의, 구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발주를 하고 조달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이게 추경 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집행하기에는 또 집행됐을 때 가능성, 리스크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좀…… 저희 정부는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해서 아주 정책적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내년에 본예산에 제대로 담아서, 내후년 예산에 좀 담아서 직접 정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허성무 위원** 예산 반영을 제때 제때 안 해 줘서 자꾸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사실은 예산 반영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물론 사업 집행자 입장에서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마 10억을 추가하기는 너무 빠듯했다는 점은 좀 고려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허성무 위원** 아니아니요, 원래 10억은 하고 추가 10억을……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와 차세대 박막 전지에 관련해, 박막이라는 것들은 건물 외벽에 BIPV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국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상업화를 빨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종합 전략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태양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이런 R&D 사업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계약이 연말까지 안 돼서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연말까지 계약 이행이 안 되

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약이 된다면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계약이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통상 절차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무리 빨리해도……

○**서일준 위원**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계약이 된다면 이것은 그냥 추가로 10억을 하고, 계약이 도저히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동아 위원** 일단 예결위 차원으로는 올리고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저희도 체크해서, 이게 굳이 불용될 거면 저희가 끝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차관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 단위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절차 진행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면 10억 추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추가 10억.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가 10억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번입니다.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선로 지중화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국가기간망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번입니다. 전력해외진출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역사업 전력기자재금융지원이 추정안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로 편성된 전력기자재금융지원의 용자 수혜 기업 선정기준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조속히 마련하고 유사 사업의 집행 지연 및 대출 승인 거절 사례를 방지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전력기자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수출산업입니다. K-그리드 사업 성장 동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것 부대의견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부대의견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 그리고 부대의견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9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번입니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의 소형모듈원전 제조부품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은 경남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SMR 제작 단계별 시험·감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등에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은 SMR 기자재 품질 안정성 인증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용합니다. 다만 지역을 특정 지역에 선정하는 문제는 공모가 상당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만 해당하는 지역이 상당 부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지역을 특정하지 않아도 어차피 SMR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추가 5억 반영은 수용합니다.

○허성무 위원 지역을 특정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공모 절차가 원칙이라서……

○허성무 위원 굳이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지역 문구는 제외하고 5억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0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 용자사업입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 용자사업을 위해서 400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은 공동접속설비 SPC 건실화하는 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제도개선한 후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동아 위원 우리 간사님인데……

○강승규 위원 제도개선을 해서 한다잖아요.

○소위원장 장철민 간사님 의견이시기는 한데 어차피 법 개정도 필요하고 이후에 금융 지원이랑 세트에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가고 이후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번,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전력계통 고장 발생 시에 태양광 발전설비 정지·고장으로 연계되는 파장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개선 교체를 위해 6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은 반드시 인버터 성능개선 사업, 교체 사업은 우리 전력망의 안정과 정전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장철민 추경에는 왜 안 담겼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소위원장 장철민 기재부 협의가 잘 안 됐었던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마 전력망에 대해서 저희만큼 절실하게 검토를……

○소위원장 장철민 하여튼 예결위 과정에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2번, 500kV전압형 HVDC변환용 전압기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변환용 변압기 국산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6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에너지고속도로 HVDC 시장을 초장부터 외국 기업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국비 60억 반영 필요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3번, VPP를 활용한 지능형 재생에너지 전력망 강화사업입니다.

VPP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모니터링·제어할 수 있는 설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

해서 2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VPP 기반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제어설비가 구축이 되어야지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4번입니다. 풍력발전 핵심 소재 원료화 지원센터 관련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풍력발전기의 핵심 소재 원료화 공정과 블레이드 재활용을 지원 하는 인프라 구축에 1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도, 풍력발전기들이 이제 연한이 도래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어서 재자원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현재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0억 원 집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기획비 조로 한 2억 내지 3억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쪽으로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2억 내지 3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억으로 동의하시는 거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사업기획 예산으로 3억 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된 것 논의가 다시 되려나 모르겠는데……

○박상웅 위원 잠깐만요. 산자부2차관님 계실 때 잠시 추가 발언할 게 있는데……

○소위원장 장철민 예, 말씀하십시오.

○박상웅 위원 지금 우리 추경이 민생 추경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예.

○박상웅 위원 이 민생 추경에 맞게, 여기서는 오늘 공식 언급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그 지역과 주민의 불편함,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용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 용자를 포함하여 이 배관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에서는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구 소멸의 원인도 됩니다. 불편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안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추경 사업에 반영은 지금 안 돼 있지만 사업으로 필요 소요가 있는 건지, 실제로 산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는 못 해도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새로 신설해서 반

영을 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이 민생 추경에 이걸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 줬으면 좋겠는데.

산자위 소위 토의 내용에서 이런 부대의견이 나왔다 하는 것을 좀 반영해 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LPG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취약지역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PG 배관망 보급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은 태양광하고 ESS 같이 연계시켜서 태양 연금이나 또는 태양광 마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전원을 언급하기보다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위기, 인구 소멸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박상웅 위원** 구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 확대 이게 LPG……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도시가스 배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역에 도시가스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가스사들이 사실은, 배관망 구축 사업에 용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용자를 안 하는 게, 사업을 안 하는 게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새로운 신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우니까 LPG로 보급을 하거나 아니면 태양광하고 ESS하고 요즘에는 히트펌프까지 엮어서 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을 활성화해라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는 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라는 의견을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웅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LPG 배관망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제대로 공급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나 500명이나 이렇게 집합을 이루고 있는 시골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자꾸 나누어서 LPG 배관망으로 하지 말고 읍 단위나 면 소재지라도 인구가 좀 있는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가져 줘야 된다, 지방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 의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반영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 보급은 찬성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업을,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명시화시키는 것보다는……

○**박상웅 위원** 괜찮지, 뭐가 문제 있어요?

○**강승규 위원** 제가 이것 한마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박상웅 위원님 얘기 보충할게요.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많은 세대가 밀집되지 않은 데서는 LNG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으면서 LPG나 다른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3배, 4배 차이 나요. 이것은 많이 지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상웅 위원님 지적은 그런 것을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할 때 망에 대한 지원사업, 그러니까 사업자는 그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모자라는 것 등을 지원해 줘서 배관 사업 등에 정

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달라니까 검토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것은 저도 농업 기반 도시 가 보니까 아주 심각해요.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소위원장 장철민 정책질의 계속하다 보면 추경 심사가 안 돼서……

○박상웅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없는 것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 달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오늘 어쨌든 예결위도 열려 있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따로 서면으로 하시는 거나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논의 방식인 것 같고……

○박상웅 위원 기록을 좀 남길 수 없나요, 여기에?

○소위원장 장철민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고 해도 의미 있는 기록이 되기 어려운 게 이미 연번으로 지금 개별 사업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구술하는 것도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차관님이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화도 가능할 거니까요.

일단 지금 저희가 보류되어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앞에 전시 관련된 게 있었고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 AI 제조자율체인가요 그 부분,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일단 그 보류되었던 사업들을…… 지금 신재생 부분은 해 봐야 또 동일한 논의가 반복될 것 같은데.

혹시 첫 번째 사업, 전시 관련된 부분은 지금 내용 아시는 분이 없으시지요?

혹시나 산자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보류사업도 구자근 위원님 관련된 사업이라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자부 추경안 심사가 한번 끝났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그사이에 지금 일부 보류되었던 사업들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논의를 조금 해 보고 일단 이후에 중기부 추경 심사는 계속하면서 조금 조율되는 대로 의결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맞춰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돼 있는 사이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들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에는 그 취지만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1번,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내역사업인 제조혁신 구축지원에 관하여 10월 이후에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AI 기술이 제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사업 착수가 4분기로 예상되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재원 투입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불공정거래 방지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240억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유는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협약 체결하는 것이 10월이나 11월에 종료되고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240억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부대의견 2건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충분히 집행 가능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감액 의견 주셨던 강승규 위원님이 원안 유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원안 유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따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2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입니다.

지자체·제조기업 등의 관심도가 높고 제조 AI 도입 및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제조AI센터 사업 선정 시 권역별로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60억 증액안 수용하고 부대의견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억 증액, 부대의견 채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인규 창업사업화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하여 도메인 AX 사업의 평균 경쟁률이 20 대 1인 것을 고려할 때 50억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대의견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과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당 지원금액이 충분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R&D, 기술보증 등 정책 연계 자원과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딥테크 창업기업에 단절 없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멘토링, 판로 지원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명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50억 증액안 수용하고 부대의견 4건도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사업별 부대의견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단일한 부대의견으로 통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면 통합 조정은 어떻게……

○소위원장 장철민 위임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잡한 내용들은 아니라서 저희가 전문위원과 같이 정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의결 직전에 부처하고 전문위원하고 정리해서 부대의견은 따로 한번 읽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타트업 파크에 대하여 제주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두 가지 증액안 모두 수용합니다만 다만 스타트업 파크 사업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증액을 시

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증액을 10억으로 하면서 지역들을 빼는 방식으로 말씀 주신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두 곳 다 저희가 수용이기 때문에 10억을 증액하고 다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 명칭은 삭제를 원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10억 증액으로 정리하고 지역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업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바이오메디컬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내 바이오메디컬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에 필요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특 1번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AI 기반 수출 디지털전시관 및 매칭시스템 구축 등 지원을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현재 전국 단위의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이 민간에서와 공공부문에서 각각 세 가지 정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ISP를 먼저 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은 ISP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의견을 주셨던 박지혜 위원님이 안 계셔서……

○강승규 위원 박지혜 위원님 의견 이따 듣도록 하고 이건 넘기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혜 위원님이 이따 오시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잠시만 넘어가서 다음 사업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진기금 1번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입니다.

부대의견 2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관련 연도 내 융자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에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금리 및 상환 조건을 제시하고 민간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기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2개의 부대의견 다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의 부대의견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기금 2번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재도약촉진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므로 5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AI 사업단 3개 지역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2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목변경 의견이 있습니다.

개별사업단 경상운영비 및 사업관리비에 해당하는 소요를 자치단체자본보조 비목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이 4건 있습니다.

처음 2건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부대의견은 사업추진계획과 사업단 운영비 및 관리비 편성·집행에 관한 지침을 신속히 수립 및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타당성 및 성과지표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우선 500억 감액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기 전에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율 기획한 AI 솔루션을 도입·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추경이 좀 긴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지금 7월 11일 자로 기재부에 적격

심사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의 210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권향엽 위원님의 비목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강승규 위원님과 정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기부로의 사업 이관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향엽 위원님의 부대의견은 수용을 하고요, 나경원 위원님의 부대의견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의견 좀 할게요.

이게 과기정통부 쪽에서 추진되던 것이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이렇게 중기부로 정리했다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금 과기부에서 기획한 사업하고 저희 중기부에서 기획한 사업은 서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그것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어서 기재부가 저희 쪽으로 이것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과기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런 퍼지컬 AI R&D에 관해서는 엇그제 과기정통부 소위에서 반영이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충분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예, 정부 의견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두 사업을 비교를 해 보니까, 사업 내용이 다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허성무 위원 여기 사업은 이미 개발된 AI 솔루션을 보급하는 문제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중소기업 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저기는 개발하고 실증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새로운 솔루션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거라서 약간 달라서 그쪽에 증액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쪽에서 동네별, 지역별 수요가 다 다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70억씩 배정을 하는 거는 약간 타당성이 좀 약하지 않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사업 규모를 추산하다 보니까 평균으로 그냥 때린 거고요.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평균으로 때린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자체별로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배정할 것이기 때문에……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차등이 될 수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 부분을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수요가 많은 곳에 좀 증액을 해 주고 수요가 적은 곳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성무 위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철회 내지 이렇게 하신 거라서 지금 그러면 210억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님들?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이 의견을 안 주셔서……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0억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고, 이관에 대한 부대의견은 지금 그러면 다 같이 철회되는 걸로 하고 뒤에 나경원 위원님 의견과 권향엽 위원님 의견, 이 두 가지는 반영을 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도 이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억 증액 그리고 부대의견 뒤에 있는 2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번 사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잠깐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2번에서 비목변경도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규 3번,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입니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 조사 선 실시 및 투자수익 배분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4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하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실투자까지 기간과 미투자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수립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4000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획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 투자 대상 기업을 보니까 우선 AI·딥테크 스타트업 펀드의 경우에는 대략 한 2800개 정도 투자 대상이 현재 있기 때문

에 그중에서 저희가 200개를 가려내는 거여서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AI·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500개 정도 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30개 정도를 추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충분히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감액 의견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대의견 2건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로 정리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하고 부대의견 두 가지 채택하는 결로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잠시 이게……

○소위원장 장철민 지금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8페이지……

○구자근 위원 4000억 삭감을 원안 유지로 돌린다고?

○소위원장 장철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모태펀드에 지금 남아 있는 미투자 잔액이 어느 정도 돼요?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현재 저희가 펀드가 만들어진 것 기준으로는 한 2조 정도가 투자 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것은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 3조 5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정도로 한 몇 조 정도의 미투자 잔액, 이게 미투자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스케줄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서 지금 투자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은 그 정도 있습니다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3조 정도가 미투자 금액이 남았다는 게 출자금에 부족해서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스케줄대로 갈 거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미투자금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 출자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출자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모태펀드에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는 말이지요. 급박한 상황은 아닐 거라는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이번에 저희가 모태펀드 출자를 다시 요청드리는 거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라고 해서 AI·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을 별도 발굴해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출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지금 4000억 넣고 나서 실질적으로 실투자 다른 성과가 나오겠어요? 지금 그러면 민간 투자도 대응으로 6000억…… 4 대 6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대략 한 5 대 5 되기도 하고 4 대 6 되기도 하고요. 그거는 출자비율은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구자근 위원 이렇게 되면 6000억이 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발굴

돼 있던 말이에요? 아니면 6000억 부분들은 지금 소팅(sorting)이 돼 있던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지금 4000억 출자를 통해서 만드는 자펀드 규모가 대략 한 7000억 정도인데 그 7000억이 투자되는 후보 기업들은 저희가 이미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딥테크 분야의 기업들이고 이것은 새로 만들어 내는 기업은 아니고 현재 있는……

○구자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추경에 굳이 이 4000억이라는 큰 돈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효과적으로 마중물 역할 하기가 쉽지 않을 듯한데 지금 이 미집행 금액, 미집행 이 모태펀드에…… 물론 따로 다 이게 세분화 돼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금액이 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그 집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이 전체적인 금액에 4000억을 더 보탠다는 게 이 추경에 맞냐는 말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다가 추진하는 것이고……

○구자근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부터 소진을 하는 게 맞지 새로운 프로젝트로 무슨 4000억을 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진 펀드들은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진 펀드들이고 그거는 펀드 만들 때의 목적이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투자가 계속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시장에서의 모태펀드 출자 수요가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면 좀 더 정부의 역할은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AI나 딥테크 스타트업 같은 미래 유망한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투자를 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맞춰서 자금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태펀드 출자를, 정부 출자를 좀 더 요청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구자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정부 투자하고 민간 또 6000억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민간투자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듯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서 있는지, 아니면 굳이 추경에 진행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지 의문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지 싶은데 제가 전체회의에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서 따로 더 진행을 시키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까마는 그래도 4000억을 바로 원안 유지로 돌린다는 게, 이 4000억 금액을……

○소위원장 장철민 이재관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장철민 이재관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계속해서 손 들고 계신데.

○이재관 위원 사실 상반기에, 지난 3월·4월에 벤처기업 관련된 부분들의 현장 간담회를 좀 많이 해 봤었습니다. 가장 많이 애로를 호소하는 것이 사실은 자금입니다. 그런데 자금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출자를 처음에 선도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신뢰성 차원에서 이 부분은 아주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집행 금액이 3조가 남았다고 그러면 저도 언뜻 이 3조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3조가 미집행이라기보다는 연간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미집행의 영역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AI·딥테크 분야에 대한 검토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AI 문제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넥스트의 주요 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그 시기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거는 규모가 워낙 크기는 합시다라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하는 의견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이 모태펀드가 AI 기업에 대한 아주 특수화된 펀드 설계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게 지금…… 아니, 모태펀드가 출자해서 자펀드를 만드는데 그 자펀드의 투자 목적이 주로 AI나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강승규 위원 그러면 기존의 3조 원 가지고는 이 자펀드를 못 만들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거기는 이미 자펀드에 출자가 되어서 펀드가 만들어져 있는……

○강승규 위원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 이거지요, 그거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펀드는 한 7년 정도 또는 8년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한 번 만들면 4년간 계속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유 자금이 있는 거는 올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 계속 스케줄 따라서 가는 거고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AI를 위해서 펀드를 구성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별도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승규 위원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지 않으면 사실 또 한 4년간 자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좀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투자한다는데.

○소위원장 장철민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소진기금 1번 사업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인규 자료 9쪽입니다.

1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입니다.

내역사업인 폐업 및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 피해 기업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496억 4400만 원을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적기에 완화하기 위해 원안 수준의 계획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비목변경 의견이 있습니다.

이차보전지원에 대해서 사업출연금 비목에서 이차보전금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0쪽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보완하고 이차보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496억 증액안 수용하고 비목변경안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잠시……

○소위원장 장철민 말씀 주세요.

○구자근 위원 코로나 피해기업들 보증 지원 경우인데 구체적인 기준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보증을 해 준 기업들을 갖다가 다시 보증 연장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증 재원을 저희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예산정책처 검토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기간 중의 최고 매출액이나 최고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전년 동월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코로나19 기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다른 관계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장 조성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조성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 기간인 20년부터 23년 매출액과 24년 매출액을 비교하는데요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연도로, 예를 들어서 2020년보다 2023년이 매출액이 떨어졌으면 그 매출액을 적용하고요,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연도로 매출액을 비교해서 폭 넓고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빚 탕감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빚 탕감 형태는 이자 조금 더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이 점점 늘어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코로나19 이후에 성실하게 자생력을 가지고 왔던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 때 보증을 이용해서……

○구자근 위원 압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계속 가고 있는 보증을 나중에 장기로 분할상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끝은 어디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끝은 나중에 장기 분할상환이 끝나면 바로 다 상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채무 감면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자근 위원 채무 감면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이것은 아닙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의존형으로, 막연하게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 이것은 한 번 자금을 쓴 것에 대한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개념이어서 정부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요즘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상환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단기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장기로 스프레드 아웃시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컨대 200만 원 갚을 것을 100만 원 갚고 내일, 모래 계속 갚게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그 당시에 현금지원 사업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사원 지적사항들이 많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꼭 그것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기간을 늘려 주는 부분이라서 상관없다손 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병행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상환 부담을 단기에 줄여 주는 것이 오히려 상환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단기에 상환 부담을 크게 해놓으면 지금 그냥 상환할 바에는 사업을 접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환 부담을 단기에 좀 줄여 가면서 계속 사업을 해서 나중에 갚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상환 능력을 좀 더 키워 준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의 생존력을 좀 더 높여 주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저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망할 회사는 빨리 망하게 시킨 다음에 재기를 지원하는 게 맞지 이것을 계속 그 이자를 연장해 주고 이자를 좀 깎아 주고 빚은 계속 떠안게 가면서 이런 정책을 유지하는 게 과연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맞나. 한 번 망할 거면 확실히 한 번 망하고 그 망한 토양 위에서 새롭게 새싹이 돋게 하는 정책을 좀 더 연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소프트랜딩시키기는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증액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소공인 특화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판로개척지원과 관련하여 소공인 제품의 경쟁력 확대 등을 위해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클린제조환경조성에 관하여 소공인 전용 화재보험 상품 개발 및 지원 15억 원,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 3억 원 등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지역소공인 육성과 관련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행정력 부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16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세 가지 증액안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이게 업종별 상황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게 맞나,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폐기물 처리 비용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위원님, 이견 다음 안건입니다. 지금 안건은……

○구자근 위원 다음 안건이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지금 안건은 연번 2번 소공인 특화지원입니다.

○구자근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세 가지 증액 의견에 대한 이견이 없으니까 증액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사업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인규 소상공인 재기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하여 목표치를 확대하기 위해 18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163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부대의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 검증 및 사후정산 체계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병행한다는 내용과 실질적인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정량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사업 개선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지원과 회복상담 채무조정제도 운영에 대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사업 추진 시 반영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는 세 가지 예산 증액안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 1차 추경을 할 때 이미 지원되는 물량을 1만 개 정도 확대해서 현재 4만 개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점포철거비 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연초에는 좀 신청이 많았다가 지금은 신청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매월 한 3000건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사실 신청이 좀 저조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이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접수 후 지원까

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장도 좀 가 보고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면 9월 정도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을 해야지만 연내 집행이 가능한데 9월 정도까지 매월 3000건을 신청받으면 한 9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4만 건 중에서 3만 2000건이 지금 5월 말 현재까지 신청이 완료돼 있고 나머지 한 8000건 정도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고요, 추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증액 부분은 불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권향엽 위원님께서 폐업, 철거비 지원 관련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진욱 위원님 그다음에 나경원 위원님 부대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연구용역비는 얼마 정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금 500만 원 정도……

○소위원장 장철민 이게 500만 원으로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보통 이런 연구용역은 지원단가를 산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지원단가를 6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게 사실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와 근거가 있나요? 지금 올해 사업 진행 중인데 남은 사업에 대해서만 기존 400에서 600으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기존에는 지원면적 상한을 20평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곳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면적 상한을 30평으로 좀 확대하다 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좀 많아져서 200만 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상한을 올립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면적 상한을 좀 높이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왕진 위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뒤쪽, 이자 지원기간이 현재 6개월로 돼 있습니까? 그게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을 충족하기 위한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맞습니다.

○서왕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구자근 위원 당부 차원에서 한마디 할까 해요.

○소위원장 장철민 짧게 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봐서 사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철거 부분만 내내역사업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폐업 후에 새출발하거나 또 재기에 방점이 찍히는 정책들도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금 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사업은 다른 쪽에도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철거비를 드리고 그다음에 재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재취업을 하든지 이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비용이 400이든 600이든 간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숙박이든지 인테리어가 많이 돼 있는 부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 형평성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잘 감안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철거 플러스 재기,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구자근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사실 저희가 철거 비용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기업당 한 840만 원 정도 철거 비용이 듭니다, 실질 비용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정부 예산으로 다 지원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지원해 드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폐기물 처리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맞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저도 간단한 것만 여쭙보면, 어쨌든 지금 물량이 넉넉하신 것 같기는 한데 예산 소진이 다 된다고 해도 소진기금 내에서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사업인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어쨌든 이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중단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정부의견대로 예산 금액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다만 이 사업이 혹시나 물량 소진된다고 해도 중단되지 않게끔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입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에 관하여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인프라를 보급하기 위해 5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제40차 부산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 개최 지원에 관하여 행사장 운

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에 관하여 연수원 건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세 가지 증액안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가지 증액 의견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5번,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경영비용 절감 효과 및 수혜점포 생존율 재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기술 보급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50억 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대의견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기술 유형별 지원계획 및 예산 배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표준계약서 도입 및 기술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업체의 무리한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장비 도입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및 기술 활용 교육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한다는 내용입니다.

15쪽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과 관련하여 비수도권에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1개소를 신규 구축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1개소를 신규 구축하기 위해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우선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예산 50억 감액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은 당초에 배리어프리기기를 갖다가 각 소상공인 매장에 도입을 해야 되는, 도입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급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다 돌려쓰기로 되어 있어서 배리어프리 이외에 다른 테이블오더라든지 서빙로봇이라든지 조리로봇 같은 그런 스마트기기는 저희가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요청드린 것인데 그것을 감액하게 되면 그런 기술 분야를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진욱 위원님께서 주신 부대의견 중에서는 당초에 기술 유형별 지원계획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전에 수립을 하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실제 신청을 받아 봐야지 구체적으로 기술 분야별 수요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전에 예산을 갖다가 미리 책정해 놓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에서 삭제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교홍 위원님과 나경원 위원님 부대의견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부분의 두 가지 증액안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차관님, 지금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관련해서 50억 삭감 의견이 있는데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배리어프리 그것 관련해서 하려는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1000개, 50억 이것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이것은……

○구자근 위원 1000개로 확대하고 이렇게 50억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50억 증액하는 것은 배리어프리와 관련된 예산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배리어프리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배리어프리기기 이외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블오더라든지 서빙로봇, 조리로봇 같은 그런 다른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 기업당 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지금 복지부에서, 지난 6월 달에 매일경제에 나왔네요.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키오스크 없던 일로 한다고 하고 복지부에서 지금 이 적용 대상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받아 놓은 것하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지금 이 50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배리어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상관없습니다.

이 50억은 배리어프리 말고 다른 스마트기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고, 사실 배리어프리도 저희가 본예산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만 복지부의 조치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사실 그 예산만 가지고는 배리어프리 전체 수요를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 통해서 그런 부분의 수요를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배리어프리기기를 도입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50억을 추가로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부처 간에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리어프리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산을 지금 갖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도 계속해서 협의를,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복지부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소상공인은 제외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복지부가 정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자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소상공인을 제외한다고 해도 배리어프리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기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꼭 그게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맞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다른 의견들은 없으신 것 같아서 원안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정진욱 위원님 부대의견이 두 개인데 앞의 부분은 그러면 제외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것은 동의를 하고요.

첫 번째 부대의견 중에서 기술 유형별 지원계획을 명확히 구분해서 수립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어차피 그것 삭제하면 앞부분도 큰 의미는 없는 것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기술 유형별 지원계획’이라는 워딩을 지우면 앞부분은 그대로 살고 뒤에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 배분을 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의미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신청 수요, 단가 특성, 지원 목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라는 것은 사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냥 부대의견 이것 앞에 하나 빼고 이렇게 뒤의 3개로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의 예산 증액안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6번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시장상권경영 혁신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추석 명절 15% 할인 특별판매 예산 821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 붐-업 여행에 관하여 산불피해지역 5개 시군 22개 시장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동 수단 임차비 등 지원을 위해 2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두 가지 증액안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지금 산불피해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은 반영이 없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사실 지난 1차 추경 때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마 다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국회 증액안이고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제가 중기부장관한테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하여튼 예산집행 과정이나 이런 데서 산불피해지역이나 이런 데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저희가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산불피해지역에 지원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미처 기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골라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드리는 것이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업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인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새바람 재기지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 환경개선과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됐던 내용 중에 아까 박지혜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보류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5페이지.

○소위원장 장철민 5페이지의 지특회계 1번,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강승규 위원 이것은 박지혜 위원님이 없지만 아까 정부가, 이게 ISP 등 기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준비해 가지고 하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은 사전 절차 미비 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따로 박지혜 의원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정부 원안으로 가도 된다고 양해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이것은 원래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논의가 덜 된 사안이 있나요, 중기부 소관 사업 중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승규 위원 이것은 정회하고 우리……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중기부 소관 사업들 정리하려고 10분 정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회하는 중에 산자부 보류사업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심사 내용이 정리되는 동안 5시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오늘 심사한 내용의 정리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지요?

전문위원, 정리한 내용 보고……

서왕진 위원님, 못 받으신 거예요?

○서왕진 위원 지금 돌리고 있어요.

○소위원장 장철민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했나 보네요. 유인물이 배부가 다 안 됐었네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인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 세출·지출 수정내역은 총 1903억 67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2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2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1568억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18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아까 정리를 위임받았던 부대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번 항목이지요?

○전문위원 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대의견 중에서 4번·5번입니다.

○허성무 위원 5번의 첫째.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그냥 단순 위임받아서 저희가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관 위원 잘 정리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부대의견 지금 정리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섭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 소관 보류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서 전시산업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수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강승규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10억 정도를, 혹시나 아까 의견 주셨던 것 중에 이게 물량이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서 다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10억 정도 감액해서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정부 의견 그거에 따라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연번 1번, 전시산업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은 10억 감액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류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두 번째 보류사업입니다. 페이지 6쪽의 연번 10번입니다.

AI 기반 표적맞춤형 의약품제조자율랩 기술개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한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아까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정부 원안 유지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구자근 위원 예.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10번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화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이후에 지금 두 가지 보류사업이 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두 가지가 16쪽에 있는 연번 3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17쪽에 있는 연번 4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이 2건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은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그래도 간단하게 더 들어 보고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다시 추가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나 이 두 가지 꼭지 신재생 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간단하게만 좀 듣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아까도 원론적인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게 지금 너무나 절박합니다. 우리가 10% 미만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요 RE100이 아니라 RE10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써야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게 안 됐을 때 기업 자체를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타협 차원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공존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아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소위원장 장철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제가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우리 국내시장에 진입하게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기업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겠다는 예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됐던, 예산을 삭감했던 원인을 늘 배제한 상태에서 중국 기업에게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는 저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추경에는 원전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가 야당으로서 그때 많이 협조를 해서, 원전 예산이 사실은 과도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그래도 협조해서 많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주신다면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밝힙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재생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안보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산업생태계 자체를 잘 살려 내는 게 중요한데 지난 3년간 완전히 생태계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어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가 정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혹시 추가로 말씀 주시겠습니까?

구자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이 부분은 전체회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전체회의 전에 삭감 의견을 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는 한데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의 워낙 핵심적인 사업이고 앞으로 또 충분하게 관련 산업 분야를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인 만큼 야당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 이 사업을 다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같은 사업이고 저희가 협상만 끝나면 언제든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당, 여야 그리고 서왕진 위원님까지 협의를 추후에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권향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여기에서는 현재 보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관한 것은 위원들의 감액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과 감액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어차피 협상을 한다는 것은 증감액 포함한 관련된 협상을 하는 거니까요, 추후에 더 협의하도록 하고.

혹시 산자부에서 한마디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이호현 큰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기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논의할 때 용자보조사업에서 중국 제품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저희가 kW당 655kg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중국 기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 금융지원 사업과 보조사업은 국내 기업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 기준으로 거의 99%, 98%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자지원 사업인 경우 조금 이것도 98%, 24년 기준으로 98%입니다만 2022년·23년에 약간 93%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차율이 상당히 높아 갖고 이차보전 사업을 좀 저희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일부 본에

산이 조금 집행이 덜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신학 제1차관, 이호현 제2차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유인규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승규 구자근 권향엽 김동아 박상웅 박지혜 서왕진 서일준 오세희 이재관
장철민 정동만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문신학

제2차관 이호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지역경제정책관 김호철

전력정책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무역정책관 서가람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김상모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기술혁신정책관 박용순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